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 최 종 보 고 서 -

발주기관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연구업체 : 지도상점.

지속가능한
도시를
상상하는
젊은이들

연구책임자 : 김남식 (지도상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찬호 (지도상점 객원연구원)

본 연구의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또는 온동네돌봄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와는
무관한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요 약 문

본 연구는 저출산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이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아동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의 돌봄 체계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돌봄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하는 마을(지역) 돌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서비스 및 그 행정의 단절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서대문구의 돌봄 자원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국내외 선진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온동네 돌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대문구의 돌봄 현황을 진단했을 때 5-9세 아동 인구 대비 돌봄 기관의 총량은 서울 내 자 치구 평균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나 권역별 수급 불균형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좌, 북가좌 권역은 인구 대비 해당 연령 아동 비율이 높아 돌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홍제, 홍은 권역은 거주 아동 수 대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돌봄 공급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센터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늘봄학교와 지역 돌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미비로 인한 연계의 단절, 아침 및 저녁 시간대의 돌봄 공백, 그리고 경직된 운영 지침에 따른 현장의 피로도 누적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의 돌봄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중구의 직영 모델, 양천구의 조례 제정 및 특화 센터 운영, 성북구의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아동의 놀 권리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핀란드 모델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제도적 통합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의 권리 보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제로 작동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우수사례 현장 답사와 전문가 정책포럼을 병행하였다. 강동구의 ‘어린이 식당’ 답사를 통해, 석식 제공을 매개로 낙인효과 없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정책포럼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전문가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자체의 칸막이를 낮추고, 정보 공유와 사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운영의 체계성’, ‘접근의 유연성’, ‘재정의 실효성’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서대문구 주도의 틈새 없는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과 구청을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교-지역사회 통합 거버넌스 심화’, 석식과 돌봄을 결합한 ‘서대문 어린이 식당’ 도입, 유휴 공간을 활용한 ‘온동네 틈새 돌봄 공간’ 및 이동 지원체계 마련,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처할 ‘인력풀’ 확대, 그리고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과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II. 선행 연구 검토	9
III. 학교-지역사회 연계사업 현황	18
IV. 돌봄 사례 조사 및 분석	23
V. 서대문구 돌봄 자원 조사	41
VI. 인터뷰	63
VII. 우수사례 선정과 현장 답사	76
VIII. 전문가 정책포럼	85
IX. 결론 및 제언	98

표 차례

[표 II-1]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소 주제별 정렬)	13
[표 V-1] 사용될 자료 특성 요약	41
[표 V-2] 자치구별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43
[표 V-3] 서울시 자치구별 방과후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44
[표 V-4]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수 비교	45
[표 V-5] 자치구별 총인구수, 5-9세 인구, 총 인구 대비 비율	46
[표 V-6] 자치구별 돌봄 기관 수 총합과 그 기관당 5-9세 인구	47
[표 V-7] 자치구별 돌봄 기관유형 당 5-9세 인구	48
[표 V-8] 자치구별 2025년 세출예산 대비 부문별 예산 비중	49
[표 V-9] 종합적 관계 확인을 위한 주요 지표 정리	50
[표 V-10]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과 세출예산 중 부문 비중	54
[표 V-11] 총 인구 대비 5-9세 인구비율과 세출예산 비중	55
[표 V-12] 서대문구 행정동별 인구수 분석	58
[표 V-13] 서대문구 행정동별 돌봄기관 수	59
[표 V-14] 서대문구 행정동별 학생통합맞춤지원 기관 수	59
[표 V-15] 서대문구 행정동별 학생맞춤통합지원 기관의 기능별 분석	60
[표 VII-1] 서울시내 어린이 식당 운영 요약	77
[표 VII-2] 강동어린이식당 운영 예산 개요	80

그림 차례

[그림 III-1] 서울미래교육지구 개념도	18
[그림 III-2]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중점과제	19
[그림 III-3] 서대문구 (위) 및 서부교육지원청 (아래) 미래교육지구 전담부서 현황	21
[그림 V-1] 총시설수와 월평균 소득의 관계	51
[그림 V-2] 총시설수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52
[그림 V-3] 키움센터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52
[그림 V-4] 지역아동센터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53
[그림 V-5] 서울형 키즈카페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53
[그림 V-6]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과 돌봄관련 부문 세출예산 합	55
[그림 V-7] 총 인구 대비 5-9세 인구비율과 세출예산 비중 시각화	56
[그림 VII-1] 강동 어린이 식당 팸플렛	79
[그림 VII-2] 강동 어린이식당 답사 사진 모음 (1)	80
[그림 VII-3] 강동 어린이식당 답사 사진 모음 (2)	80
[그림 VIII-1] 전문가 정책포럼 사진 (1)	85
[그림 VIII-2] 전문가 정책포럼 사진 (2)	86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발히 시행되며 확장되는 정책 중 하나로 방과후 초등 돌봄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접근되기 때문이다. 방과후 초등 돌봄정책의 필요성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 단순히 양적인 수요의 문제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아동 발달에서 특히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동은 방치되거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학업 격차와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는 돌봄이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공정현, 유정화, 2025; 박신희, 김민성, 2021).

나아가 광의의 돌봄정책은 단순한 보육서비스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생태계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기에 그 중요성을 가진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돌봄은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아동 발달을 위해서는 보호와 학습이 동시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요구되고, 이 점을 학부모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장지은, 이성희, 2021). 이에 최근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관련 공간들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 속에서 ‘보호’와 ‘학습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공간(정설미, 문희원, 정동욱, 2021)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기능도 두 영역의 유기적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초등 돌봄에 대한 정책이 증대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과 돌봄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있어 기관 간 중복과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양애경, 양윤이, 2018). 예컨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자체 돌봄 기관은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능 중첩으로 인해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자원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할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은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심정미, 채현탁, 2015; 최종진, 박균달, 정영교, 2016; 양애경, 양윤이, 2018).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은 돌봄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대문구의 돌봄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시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전략의 일부로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과

돌봄을 연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자치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자치구의 자원의 따라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데, 서대문구의 경우 ‘우리동네 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현재 서대문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되면서,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돌봄체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서대문구 초등 돌봄 수요와 자원을 조사하여 정보를 최신화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둘째,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된 돌봄 기관 및 정책의 효과성을 주민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미비점을 확인한다. 셋째, 국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의견 포럼, 공론 공유 등을 통해 서대문구의 특수성과 주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검토를 넘어, 주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재구성하고 서대문구 교육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 장은 방과후 초등돌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현재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본다. 이 장에서는 방과후 초등돌봄과 함께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데, 이는 현재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III 장에서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현황으로 미래교육지구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개괄을 다루어, 본 연구의 온동네 돌봄과의 연계성을 탐색한다. IV 장에서는 국내외 돌봄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초등 돌봄체계의 사례를 국내는 서울시(광역) 및 자치구, 해외는 핀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V 장부터는 서대문구의 현황에 집중하여, 서대문구 돌봄 자원을 서울시 내 자치구와의 비교와 관내 행정동 간 학생맞춤통합지원 자원 비교를 수행하여 현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VI 장은 서대문구에서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를 섭외한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을 더 면밀히 확인하고자 한다. VII 장은 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답사하여 운영현황 파악과 정책적 제언을 시도한다. VIII 장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 현재 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과 돌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정리한다. 끝으로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 망라하여,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돌봄은 왜 필요한가?

돌봄(care 또는 caring)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 이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행위를 가능케하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한다(Daly, 2002: 252). 이러한 돌봄의 광의적 정의는 기존 돌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비거래적 서비스의 일종이었던 것에서 현재는 벗어나 있음을 드러내며, 사회화(socialization)된 행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돌봄은 UN이나 OECD에서도 일종의 권리로서 제시한다. 이 돌봄의 권리는 크게 아동 입장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장수정, 2020: 130). 먼저, 돌봄을 받을 권리는 주지하다시피 아동 또는 수혜자가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연계된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돌봄을 제공할 권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돌봄을 제공할 권리란 부모나 양육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화된 돌봄의 상황에서 부모나 양육자가 노동시장 참여 과정에서 이를 자신의 아동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돌봄을 사회가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 포함한다.

이렇듯 아동기 돌봄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아동기 돌봄의 중요성을 정리해본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한부모 가정 확대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돌봄 기능을 약화시키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이후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 가구에게 출산과 그 이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는 데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수영, 2024; 김정호, 김선아, 2025). 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해서 이 분야에 적극적인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초등 시기의 돌봄은 발달 단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고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동은 방치되거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학업 격차의 확대, 정서적 불안정, 사회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임혜정, 2017a; 임혜정, 2017b). 또한 돌봄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학교밖 시간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돌봄 관련 정책들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아동의 성장과 그에 대한 아동 간 불평등 해소에 아동 대상 공적 돌봄 정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백순근 외, 2019; 임혜정, 2017a).

종합하자면,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은 아동의 발달을 보장하는 교육적 기능,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관련 돌봄정책은 단순히 아동 보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왜 지역사회에서의 교육-돌봄의 연계는 왜 중요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돌봄 정책에서 교육과 돌봄의 연계는 공적 돌봄의 의미와 그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과 돌봄의 연계는 아동 발달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한국의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보호와 학습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돌봄이 단순히 아동의 안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학습권과 발달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돌봄을 보육이나 교육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를 연결하는 중간지대로 재개념화해야 함을 시사한다(박준서, 2024; 심정미, 채현탁, 2015; 양애경, 양윤이, 2018; 이방실, 권정윤, 2025; 정설미 외, 2021).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은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를 최근에는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 ‘학교-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돌봄 및 교육서비스 체계를 의미하며, 특히 학교가 끝난 이후 아동의 안전, 학습, 정서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둔다(홍진주 외, 2021). 이 돌봄을 행하는 주체는 주로 교육기관인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로 압축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여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델이 실제로 실행된 것이 최근 2024년 도입된 ‘늘봄학교’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시행되었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이외 지역 내 여러 돌봄서비스 등을 학교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는 정책이다(박준서, 2024; 이성희, 2024; 황재연, 2024).

학교-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여러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기관이 협력할 경우 아동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

아지며, 돌봄 자원의 활용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양애경, 양윤이, 2018). 즉, 제도적으로 분절된 구조 속에서는 기관 간 중복과 경쟁이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내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간 서비스 대상이 겹치면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운영 주체 간 갈등이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장수정, 송다영, 백경훈, 2019). 결국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정책 수혜자인 아동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방향성으로 굳어지고 있다.

학생과 가정 차원에서도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 확보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방과후 또는 휴일에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통한 배움과 체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계층의 아동의 경우, 이 체계 내에서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실제로 장기적으로 돌봄 기관을 이용한 아동은 정서적, 사회성 성장과 자기주도성, 학습능력, 자기통제 등의 역량이 증대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정현, 유정화, 2025). 또, 부모가 느끼는 아동 돌봄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박신희, 김민성, 2021).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은 돌봄이 단순 행정 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돌봄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과제이며,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체계로 발전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돌봄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까지 제공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장지은, 이성희, 2021),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구조가 강화될수록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는 초등돌봄 정책이 단순히 보육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적 가치와 공동체적 책무성을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학교-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돌봄정책은 정권 교체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불안정성을 보이기 쉽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돌봄 서비스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박준서, 2024). 이는 돌봄정책을 단순한 복지 시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인프라로 확립하는 과정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학교-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은 도입 초기에 큰 진통을 겪었다. 발생했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들을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합 돌봄 모델을 도입하기 전 교육과 돌봄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최종진 외, 2016; 정설미 외, 2021; 황재연, 2024). 이는 학교 또는 교사가 돌봄까지 전담하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과후학교의 단순한 재구성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돌봄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점유하여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책과 시스템 상의 불명확성은 결국 이 정책을 실제 실행하는 구성원 간 갈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김선영, 2024; 박준서, 2024; 조민기, 김미량, 2025). 초기에는 학교마다 신청방식, 운영방식, 돌봄 업체 선정 기준 등이 통일되지 않아서 교사와 실무자들의 혼란과 행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정책에 대한 비토가 증가하였다. 셋째, 그리고 긍정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이 정책이 긴급하게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면서 질적인 차원보다 양적 차원에만 집중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했다(심정미, 채현탁, 2015; 정설미 외, 2021; 조민기, 김미량, 2025). 즉, 기존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할 뿐, 프로그램이 제대로 아동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인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넷째,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중간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늘봄지원센터 등의 지원기능도 미비하다는 점도 언급된다(김선영, 2024). 이외 연계되어 늘봄교사(늘봄전담사) 등 학교-지역사회 통합 돌봄모델을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의 미비와 급여체계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양애경, 양윤이, 2018; 최종진 외, 2016). 이렇듯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선행연구들은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효과적인 협력 방식이 무엇보다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의 명확성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학교, 지자체, 돌봄교사(돌봄전담사) 간의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정책 실행력이 약화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해왔다(김선영, 2024; 황재연, 2024). 이렇듯 행정적 지원 체계의 정비는 협력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담 행정 인력을 배치하며,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돌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또한 물리적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예산 지원과 같은 행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협력 구조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초등 단계 아동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를 이끌어내어 협력 기반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와의 연계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관할 자치단체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 내 돌봄 체계 또는 교육청과 연계하는 방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부모/아동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충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다. 통합돌봄을 통해 정책 수요자에게 만족을 제공한다면,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학교와 학부모 간 돌봄에 대한 관점 차이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가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나서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단기적인 서비스의 제공의 역할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 역할을 제도적으로 실현했던 것이 미래교육지구사업(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처들이 분절적으로 담당한 다양한 기관과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다(한혜정, 2022).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적, 재정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양한 교육적, 복지적 자원들을 수요자 아동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과제를 크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효과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 협동할 주체들 간의 신뢰와 전문성으로 꼽는다(김형규, 2023; 박성희, 권양이, 2023).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서대문구의 온종일 돌봄 체제 및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관련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제목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II-1]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소 주제별 정렬)

저자	작성연도	중심내용 요약
(통합) 돌봄 개념과 이론		
이방실 권정윤	2025	우리나라 유아교육, 보육, 돌봄 개념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를 시대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각 개념의 철학적 기반과 실천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 개념의 이론적 통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유보통합 정책과 연계된 돌봄의 통합적 이론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성희	2024	2024년 전국 초등학교에 시행될 늘봄학교 정책의 비전과

저자	작성연도	중심내용 요약
		개념을 관계재(relational goods) 이론과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교화하였다.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사회적 가치 생산의 공동재로 재개념화하며, 국가 책임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거버넌스 모델로 제시된다. 정책 목표는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관계 보장과 교육적 성장을 중심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도입과정, 운영방식		
양윤이 이태연	2013	초등돌봄교실의 직영과 위탁 운영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위탁은 직영에 비해 교사의 전문성 및 학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무 경력이 짧고 연수 참여율도 낮았다. 위탁 방식은 위탁교사들이 교육과 보호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수익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초등돌봄교실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박준서	2024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정책을 윤리적,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늘봄학교 정책은 '교육+돌봄체제의 구축을 통한 초등 공교육의 재개념화'를 제시한다고 보았으며, 늘봄학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가 갖춰질 때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황재연	2024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서울형 늘봄학교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당위성만으로 추진되어 교육적 가치 공유 부족, 운영 형태 괴리, 학부모 집단 영향력과 갈등, 내부 갈등과 외부 환경 미고려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정책의 명확한 성격 규정과 점진적 개선, 법제화 조급함 경계 등을 제언하였다.
정책에 대한 인식 (아동,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사)		
박신희 김민성	2021	광주지역 두 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7개월 이상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아동들의 일상에서 경험한 돌봄과 배움의 양상을 시간, 공간, 활동 차원에서 질적 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과 학교를 보완하는

저자	작성연도	중심내용 요약
		중간지대로서 아동들에게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며, 다양한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프로그램 과다 운영으로 아동 몰입 부족의 한계도 보고되었다.
장지은 이성희	2021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방향을 학부모 요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산층 어머니들은 주로 안전을 위한 돌봄을 기대하는 반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은 교육을 위한 돌봄에 대한 기대가 강했다. 향후 돌봄 정책은 두 유형의 돌봄 성격을 고려하여 자원 조달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양윤이 양애경	2022	학교안(초등돌봄교실)과 학교밖(다함께돌봄센터) 돌봄운영 실태 및 개선점에 대한 아동돌봄교사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초등돌봄이 지자체 돌봄보다 학습과 특기적성 계발, 사교육비 절감에 더 효과적이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다. 돌봄 전담사들은 급여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성준	2022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수요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석하고, 집단별 돌봄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정기적 돌봄 선호 집단’, ‘안전한 일시보호 선호 집단’, ‘비정기적 돌봄 선호 집단’ 세 가지 수요 유형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아동 연령과 유사 자원 인지 여부가 수요 유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선영	2024	2024년부터 시행된 늘봄학교 정책의 도입과 초기 실행 과정에서 교육 주체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질적 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돌봄 공백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역할 혼란, 업무 부담, 운영 방식 불균형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역할 명확화, 제도화, 중간지원조직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민기 김미량	2025	서울형 늘봄학교 도입 효과와 문제점을 초등학교 교사 의견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늘봄학교는 명확한 목표와 실효성이 부족하며, 학업 성취도 및 정서적 안정 등 교육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정책의 보완점으로는 운영

저자	작성연도	중심내용 요약
		시간 유연화, 학생 중심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확보, 행정 지원 확대, 학교 시설 개선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정현 유정화	2025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아동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심층 탐색하였다. 아동들은 센터에서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자기주도적 학습 및 즐거움을 경험하며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다만, 향후 프로그램 개선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더욱 돌봄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정책의 실태, 문제점, 쟁점		
심정미 채현탁	2015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 쟁점을 탐색하기 위해 두 기관의 역할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중복과 질 저하, 인력 부족, 행정 칸막이 문제 등이 협력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전반적 제도 정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역 돌봄체 활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등을 통한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진 박균달 정영교	2016	현재 실시 중인 초등돌봄정책의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법적 근거의 불분명, 시설의 미비로 인한 안전 우려,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 돌봄교사 전문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쾌적한 시설환경 지원, 학부모 경비 부담 최소화, 돌봄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범정부 통합지원체제 구축, 학교와 돌봄담당교원의 업무 경감 등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양애경 양윤이	2018	초등돌봄교실의 추진과정, 운영성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를 통해 법적 근거 미비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설미 문희원 정동욱	2021	국내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효과와 쟁점을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참여여부가 돌봄공백 시간, 사교육비, 학교 적응도,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정책의 교육적 목적이 불분명함을 지적하였다. 향후 명료화와 질적 성장이

저자	작성연도	중심내용 요약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장지현 양영하	2025	2023년 도입된 초등 늘봄학교 정책의 주요 이슈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7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학계는 정책모델과 구조설계에, 언론은 예산, 인력, 안전 등 실행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어 논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전국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드백형 거버넌스, 표준화된 행정 절차, 특별회계 신설, 참여 기반 프로그램 설계 등을 제안하였다.
해외 사례		
임현정 정영모	2017	한국과 일본의 초등교육정책을 비교하여 유휴교실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학교를 지역사회 자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학교를 정규교육 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초등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유휴교실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송희 홍승주	2021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영국 NHS의 통합돌봄 모델인 뉴케어모델과 비교 분석하였다. 다학제 팀 구성, 민관 협력, 서비스 다양화, 돌봄종사자 지원, 시민 참여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III. 학교-지역사회 연계사업 현황

본 장에서는 현재 학교-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미래교육지구’ 현황을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돌봄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과의 연계 시행되고 있었다.

1. 미래교육지구 개요

서울미래교육지구란 “서울시교육청(지원청)-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 으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성장경험 제공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즉,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 협력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자원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계승하여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림 III-1] 서울미래교육지구 개념도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의 중점과제는 ‘지역연계-협력강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지역연계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크게 나뉘며, 전반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며 돌봄의 경우 ‘학생성장통합지원’ 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그림 III-2]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중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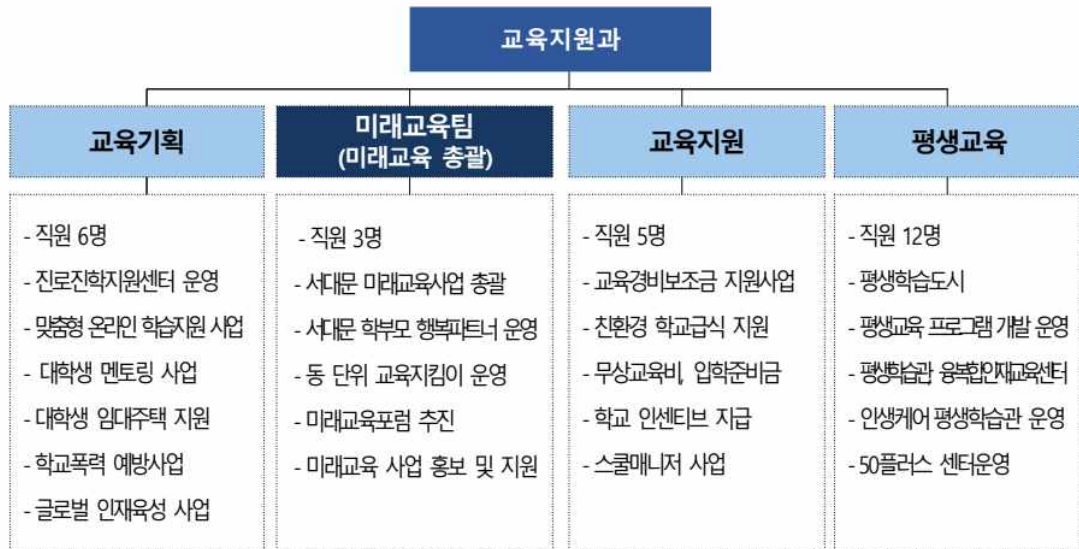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

서대문구의 미래교육지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대문미래교육지구의 2025년 계획에서는 학교-지역사회 연계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현되고 있다. 먼저, 서대문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업무 담당자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정책을 공동 수립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서대문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동 단위의 교육지킴이(Edu-keeper)를 위촉하고, 학부모 행복파트너를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지구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서 중 서대문구 항목 발췌).

2. 학생맞춤통합지원 개요와 돌봄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6년 3월 시행예정) 으로 정의된다. 이는 과거 학교에서 교사가 전담하던 학생 개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다양한 주체와 책임자로 분산하되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그 사각지대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위기 학생을 발견하고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은경(2025)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다층지원체계(Multi-tiered systems of students)와 맥락을 같이하는 정책이며, 교육현장에서의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학교-지역사회 연계가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된다. 여기서의 연계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 맞춤 지원”,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생지원 연계 활성화”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가이드북, p. 5)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안전망, 위(Wee)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등”을 망라하여 연결하며,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ibid, p. 12) 지역에 존재하는 기관들을 연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공급받아 실질적으로 학생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III-3] 서대문구 (위) 및 서부교육지원청 (아래) 미래교육지구 전담부서 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서울미래교육지구 지구별 사업 계획서. p. 100.

다만,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일반적인 돌봄 정책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만 동일한 정책은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는 학업성취 및 정서, 심리, 행동적인 문제까지 포괄하여 이것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의 돌봄을 고려하기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지자체가 당면하는 돌봄의 문제는 취약계층의 복합위기를 포함하면서도 일반 중산층 가정임에도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두 사업은 각자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연계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지자체의 일반적인 돌봄은 ‘보편적 예방’ 차원의 성격을 강화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는 선별적이면서 심화적인 개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자체의 돌봄 기관에서는 아동이 학교 밖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정환경의 변화나 아동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아동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대두되는 초등학교의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교육청-지자체 간 자원연계-업무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되 큰 틀에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지자체의 방과후 돌봄 및 필요한 아동의 복지지원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IV. 돌봄 사례 조사 및 분석

1. 국내 사례

1) 서울시 초등 돌봄체계 사례 정리

(1) 정책 배경과 제도화 과정

서울특별시 2018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을 출범시키며, 초등돌봄을 특정 취약 계층 지원에서 벗어나 ‘온종일 돌봄 정책’ 및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흐름과 맞물려 있었으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방향을 넘어 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전미양, 최현임, 2020). 서울시는 2020년 당시 2022년까지 400개소 설치, 초등 연령 아동 약 30%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고(우리동네키움포털, 2020a), 이를 통해 돌봄을 시민의 권리이자 지방정부의 책무로 제도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센터 설치 2018년 4개소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여 2020년 3월에는 69개소로 확대되었고, 2024년 11월 기준 258개소, 2025년 1월에는 266개소가 운영 중이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 13시~20시, 방학 중 9시~18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융합형 센터는 9시~20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구분되며, 특히 거점형은 권역 단위 허브 역할을 하면서 주말·방학 프로그램, 문화체육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강하라, 류임량, 2024).

또한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2020)’을 통해 공간·안전 표준을 제도화하였다. 입지는 학교 도보 10분 이내, 최소 전용면적 66㎡ 이상, 아동 1인당 3.3㎡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 설비(CCTV, 손 끼임 방지, 모서리 라운딩 등) 기준이 명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유휴공간 활용이 아닌 아동친화적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다. 실제 성북구 12호점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리실, 프로그램실, 소규모 텃밭을 갖추고, 정기 30명, 일시 6명의 아동을 수용하여 월 5만원의 정기 이용료, 1일 2,500원의 일시 이용료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내 손안에 서울, 2024.2.14.).

(2) 서비스 확장과 이용 현실

서울시는 방과후중심의 돌봄을 넘어 2024년 ‘아침돌봄’을 시범 도입하여 돌봄의 시

간적 범위를 하루 전반으로 확장하였다. 시범운영은 10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7,10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경향신문, 2025.2.18.).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고, 정규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맞벌이 가족의 출근과 등교 시간 불일치를 완화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내 손안에 서울, 2024.2.14.).

그러나 서비스 확장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사에 따르면, 많은 보호자들이 대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했거나 가까운 곳에 센터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정원 20명인 센터에 수십 명이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었다(강하라, 류임량, 2024).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 과잉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인 동시에 돌봄 서비스가 단순한 아동 보호를 넘어 가정의 생계와 아동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프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3) 거버넌스와 향후 과제

서울시는 돌봄 정책을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 발전시키고자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우리키움참여단’ 등을 운영하였다. 이는 돌봄을 단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설계하는 돌봄민주주의(care democracy)의 구체적 실행을 지향한 것이다(김송이, 장수정, 2024).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형식적으로 머무르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김송이, 장수정, 2024).

종합적으로, 서울시 초등돌봄체계는 보편성과 공공성 확대, 시간대 확장, 거버넌스 제도화 등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공급 부족, 지역 간 편차, 돌봄 인력의 불안정한 처우, 거버넌스 실질화 미흡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오마이뉴스, 2023.6.11.). 따라서 향후 서울시 돌봄 정책은 단순히 센터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를 넘어, 서비스 질 관리, 인력 구조의 안정화,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사례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가 초등돌봄 체계를 설계할 때,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중구 초등 돌봄 체계 사례 정리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시 차원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책과는 별도로, 학교 공간을 활용한 ‘학교돌봄터 지자체 직영 모델’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대표적인 자치구이다.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돌봄 운영 주체를 학교와 지자체가 나누어 맡도록 정책 기초를 제시하자, 중구는 이를 실제 현

장에 구현한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박지영, 2018). 특히 중구는 노후 주택지와 맞벌이, 조손가정이 많은 주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방과후 돌봄 수요가 일찍부터 제기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관내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내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초등 돌봄을 제도화하였다(중구교육보육포털, 2021.4.16.).

중구 학교돌봄터는 설치와 운영 면에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운영 주체는 중구청 아동청소년과이며,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한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맞벌이 가정의 수요를 반영해 저녁 시간까지 연장 운영을 시도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용 대상은 주로 초등 저학년(1~3학년)이며, 맞벌이나 취약계층 가정 아동이 우선 배정된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간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중구교육보육포털, 2021.4.16.). 이러한 구조는 아동이 학교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는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역시 단순 보호를 넘어 학교 교육과 가정 돌봄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 서비스로는 간식 제공, 숙제 지도, 귀가지도가 있고, 확장 서비스로는 독서 활동, 미술·음악 활동, 체육 활동 등이 운영된다. 더 나아가 학교 내 도서관, 과학실, 정보화실 등을 활용해 독창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다(중구교육보육포털, 2021.4.16.).

수요와 이용 현황을 보면, 중구는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이 많아 돌봄 수요가 꾸준히 높은 편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강하라와 류임량(2024)의 조사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 아동은 초등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기자 발생 비율도 높았다. 중구는 이에 대응해 매년 학교돌봄터를 추가 설치하였으나, 학교 공간 여건이 부족한 경우 신규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지역의 공간 자원과 돌봄 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구의 학교돌봄터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 간 협력이 특징적이다. 교육청은 시설 리모델링과 교사 인력 관리에 협조하며,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담임교사와 돌봄교사가 협력한다. 구청은 운영과 예산을 총괄하고 돌봄 인력 채용 및 관리까지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돌봄 협의체와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정기 협의회가 이루어지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김송이와 장수정(2024)은 돌봄 거버넌스 연구에서 학부모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중구 학교돌봄터의 사례의 의의는 명확하다. 첫째, 서울시 키움센터나 교육청 방과후 교실과 달리 구청 직영 모델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둘째,

아동이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다. 셋째, 학교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학교 공간 여건에 따라 설치 확대가 제약되고, 전담 돌봄 인력의 고용 안전성 및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김송이, 장수정, 2024; 중구교육보육포털, 2021.4.16.).

3) 양천구 초등 돌봄 체계 사례 정리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초등학생 대상 돌봄 정책을 제도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지자체이다. 특히 2020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청장의 책무, 지원 범위, 추진 체계 등을 명시하고, 구 차원의 방과 후 돌봄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양천구의회, 2019). 이 조례는 단순히 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양천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청 내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지역 돌봄 협의체’ 총괄 기능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이 협의체는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은 서울시 차원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책과 병행되며, 구 단위에서 맞춤형 돌봄정책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제공한다(양천구의회, 2025).

양천구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면서, 다른 구와 차별화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키즈카페의 복합 모델을 구축하였다(서울특별시의의회, 2023). 대표적으로 목동에 위치한 거점형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는 단순한 방과후 돌봄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VR체험실, 급식시설, 아픈 아이 돌봄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초등 아동이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면서도 여가, 교육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화 모델은 돌봄을 ‘단순 보호’에서 ‘발달 지원’으로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운영 시간 역시 다른 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일반 센터는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양천구 거점형 센터는 방학기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시간 돌봄을 제공한다(양천구소식, 2025.2.24.). 또한 긴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과,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을 위한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양천구는 2024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강사풀을 모집해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국민대학교 공지사항, 2024.10.23.). 이를 통해 아동들은 숙제 지도, 간식 제공과 같은 기본 돌봄을 넘어,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은 이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된다. 양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정기 이용료는 월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돌봄교사가 상주해 안전을 보장하고, 급식이나 간식 제공, 프로그램 운영이 경제활동 지속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양천구소식, 2025.2.24.). 특히 긴급돌봄과 방학 장시간 돌봄은 ‘돌봄 공백’에 대한 실질적 해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게 보고된다.

양천구 사례의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돌봄을 구 단위 정책의 법적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둘째, 거점형 키움센터와 키즈카페 결합을 통해 아동 발달과 여가 활동을 포괄하는 복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셋째, 운영시간 확장과 긴급돌봄,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 필요에 대응했다는 점이다. 넷째, 강사풀 제도를 통한 프로그램 전문화와 지역 연계 강화는 돌봄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우선, 시설 정원 대비 수요가 많아 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구 전체에 동일한 수준의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거점형 센터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위탁 운영 구조 특성상 돌봄 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오마이뉴스, 2023.6.11.).

4) 성북구 초등 돌봄 체계 사례 정리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초등 돌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교육·복지·문화 자원을 연계하는 ‘온마을 돌봄’ 모델을 강조해왔다(서울사랑, 2018.10.). 이는 단순히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 돌봄을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성북구는 저층 주거지와 신축 대단지가 공존하고, 다문화, 맞벌이 가정이 밀집한 특성을 지닌 만큼, 돌봄 수요가 높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했다.

성북구는 먼저 입지와 수요 반영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2025년 6월 개소한 성북구

1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장위4구역 대단지 입주 전에 설치되어, 새로 유입될 아동 돌봄 수요를 사전적으로 고려한 사례였다(뉴시스, 2025.6.30.). 또한 성북구 12호점은 미아초등학교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조리실, 놀이공간, 소규모 텃밭을 포함한 아동친화적 공간 설계로 주목받았다. 개소 직후 정원이 빠르게 채워졌다는 점은 지역 내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내 손안에 서울, 2024.2.14.).

운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특화된 시도가 확인된다. 성북구 센터들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7시,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부 융합센터는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특히 성북 14호점은 방학 중 중식을 무료로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였다(뉴시스, 2025.6.30.). 정기 이용료는 월 5만원, 일시 이용료는 1일 2,5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공적 돌봄을 합리적 비용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성북구의 돌봄 체계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교육 연계에서도 특화되어 있다. 2024년 성북구는 성북거점형 키움센터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늘봄학교와 연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아동들이 직접 참여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서울강북신문, 2024.9.3.). 또한 같은 해 열린 ‘키움 JOB월드’ 행사는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진로 탐색과 체험형 교육을 결합한 사례로 보도되었다(뉴스와이어, 2024.12.2.). 이러한 시도들은 돌봄을 단순 보호 기능에서 벗어나 학습, 체험, 문화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 아동 발달 지원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책 차원에서는 성북구청이 2025년 ‘돌봄공백 해소 및 아동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취약가구 조기 식별, 주민 인식 강화, 체험형 교육 확대 등 다섯 가지 전략이 포함되었다(서울신문, 2025.7.12.). 또한 성북구는 행정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성북구는 승례초등학교·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초등학생 방과후 쉼터’ 운영을 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공간 구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돌봄 모델을 구현하였다(전국매일신문, 2019.11.22.). 또한 성북구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 돌봄기관 아동들을 대상으로 남산 케이블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아동에게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돌봄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뉴스와이어, 2025.2.21.).

5) 마포구 초등 돌봄 체계 사례 정리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초등 돌봄 정책에서 거점형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

특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반형 센터의 기본 돌봄 기능(간식 제공, 숙제 지도 등)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 확장형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우선 마포구는 2021년 서울시 최초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했다. 거점형 센터는 권역 내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주말·방학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우리동네키움포털, 2020b). 이곳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체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주말 프로그램은 지역 공연장, 체육시설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는 돌봄을 단순히 방과후 시간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 발달과 여가권 보장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마포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단순한 돌봄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는 점도 돋보인다. 실제로 마포구는 공덕동에 융합형 키움센터를 조성해 급식 제공 및 주-야간, 주말 돌보까지 보완하였고(라이센스뉴스, 2021.11.18.), 노인복지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하여 세대공감 프로그램과 방과후 아동 돌봄 봉사를 운영하며 세대 간 교류와 사회문제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마포구 시설관리공단, 2024.12.13.).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전 10시부터 7시,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일반 센터와 동일하지만, 거점형 센터는 주말, 방학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의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일부 거점형 센터는 야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시민일보, 2021.11.18.).

거버넌스 측면에서, 마포구는 제도적 기반 위에 돌봄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지역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마포구의회, 2023). 또한 마포구는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면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아동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매일일보, 2023.2.24.). 이러한 점에서 마포구의 초등 돌봄체계는 제도적 거버넌스와 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6) 동대문구 초등 돌봄 체계 사례 정리

동대문구는 서울 동북권에서 학령기 아동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으로,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의 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책에 발맞추어 센터 확충에 힘써왔다. 2024년 기준 동대문구에는 7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개소(8호

점)가 이어지고 있다(동대문구청, 2025.1.20.). 센터는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일부 융합형 센터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되어 맞벌이 가정의 수요를 고려한 형태를 보여준다.

센터의 운영 내용과 프로그램 구성은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2024년 여름방학 동안 동대문구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등학생 95명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4차산업 스마트교육 여름방학캠프'를 실시하였다(자치행정신문, 2024.8.14.). 이러한 활동은 단순 돌봄을 넘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지역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와 협력하여 독서 지도, 놀이 활동,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대문구는 최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침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시간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개소한 8호점 키움센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돌봄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이 겪는 등교 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다(동대문구청, 2025.1.20.). 또한 센터는 단순 보호와 과제 지도를 넘어 체육·문화예술 활동,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아동의 발달과 여가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시설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베이비뉴스, 2022.2.3.).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동대문구는 돌봄 체계를 행정 주도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2025년 초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돌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 민간 기관 관계자들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동대문이슈, 2025.9.23.). 이는 키움센터 운영이 단일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내 복지-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구 차원의 돌봄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2. 해외 사례

1) 핀란드 초등 돌봄체계 사례 정리

(1) 도입 배경

핀란드의 방과후 돌봄 정책은 비교적 최근에 제도화되었지만, 그 도입 과정에는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전환이 깊이 작용했다. 1970~1980년대 동안 핀란드는 유아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체계를 구축하였고, 0~6세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는 이미 국가 복지 체계에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은 체계화 되지 못한 채 교회, 자선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이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패치워크형 서비스’에 의존했다(Forsberg & Strandell, 2007: 394). 이와 같은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크고, 돌봄 접근성에서도 불평등을 야기했다.

1990년대 들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초등 저학년 아동이 방과후에 집에서 혼자 지내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고, 언론에서도 아동의 안전, 정서 발달, 사회적 관계 형성 측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Karlsson, Perälä-Littunen, Böök, & Löfdahl Hultman, 2015).

이러한 담론은 돌봄을 단순히 부모의 책임으로 둘 수 없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권리로 보장해야 할 권리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켰다. 특히 부모와 아동 단체들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입을 요구하였고, 이는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시민사회의 압력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결합하면서, 돌봄 제도화 논의는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의 경계를 넘나드는 주제로 자리 잡았다.

결국 2003년 「기본교육법(Basic Education Act 628/1998)」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위한 아침 및 오후 활동 제공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었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Finlex Data Bank, 1998/2003; 남궁욱, 2025). 이는 돌봄을 가족 차원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전환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었다. 동시에 UN 아동권리협약(1989)의 이념이 반영되면서, 돌봄 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d.).

(2) 정책 특징

첫째, 핀란드 방과후 돌봄은 교육적 지향에서 독특하다. 활동은 아동의 웰빙과 사회 정서적 발달, 창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설계되며, 학업 보충은 부차적 기능에 머문다. 놀이, 예술, 스포츠, 야외활동 등 비형식 학습이 중심이 되며, 아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d.; 남궁욱, 2025).

둘째, 참여 방식은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는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가지지만, 아동과 가정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지원 아동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해, 가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혜택을 먼저 누리도록 하고 있다(Finlex Data Bank, 1998/2003; 남궁욱, 2025).

셋째, 거버넌스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중앙정부는 법과 지침을 통해 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학교, 민간단체, 복지기관, 지역 문화·체육 단체 등과 협력하며, 중앙의 표준성과 지역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다층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남궁욱, 2025). 지자체가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d.).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위원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Eurydice, 2023.11.27.).

넷째, 재정 운영은 공공재정과 학부모 부담이 결합된 구조이다. 학부모는 월 일정액을 지불하지만,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아동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헬싱키는 2025년 1월 기준, 하루 이용 시간(16:00 종료 또는 17:00 종료)에 따라 월 100유로(한화 약 16만원) 또는 120유로(한화 약 19만원)를 부과하고, 가구 소득에 따라 감면 제도를 적용한다(City of Helsinki, 2025.1.8.). 이러한 구조는 형평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남궁욱, 2025).

다섯째, 운영 방식은 유연성과 소규모 원칙을 따른다. 법은 연간 570시간 또는 760시간 제공 모델을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하고, 아동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지도 인력은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사 1인당 아동 수는 13명을 넘지 않도록 권고된다. 이는 안전성과 아동 개별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제시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d.).

(3) 주요 사례

헬싱키(Helsinki)시는 방과후 돌봄 운영의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헬싱키시에서는 학교 기반 시설과 지역 문화 센터를 활용해 놀이, 예술, 스포츠, 숙제 지도 등을 포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월 100~120유로로 책정되며, 저소득 가정에는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City of Helsinki, 2025.1.8.). 운영 장소는 학교 또는 인근 지역의 가족 센터(Family Center)를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신청이나 정보 검색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우너하고, 이주배경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아동 만족도와 학부모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남궁욱, 2025).

쿠오피오(Kuopio)시 역시 법적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른 요금 차등을 명확히 고지한다. 또한 학교 일정과 연계해 돌봄 시간을 조정하고, 간식 제공, 안전관리 규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City of Kuopio, n.d.).

핀란드 모델(Harrastamisen Suomen malli)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모든 아동이 방과후에 최소 하나의 취미 활동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로, 음악-스포츠-로봇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400만 유로(한화 약 240억원)를 지원하여 2024/25학년도에는 258개 지자체가 참여해 운영되었으며, 특히 취약집단 아동의 참여율을 크게 끌어올렸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24.12.10.).

아난탈로(Annantalo) 예술교육센터 예술 중심의 돌봄 활동을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헬싱키시가 1987년 옛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아동·청소년 전용 예술교육기관으로, 지자체 예산과 프로젝트 기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아난탈로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규 학교 수업과 연계된 예술 활동을 함께 제공하며, 연극, 미술, 무용, 음악,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초기에는 단기계약 강사 중심이었으나, 점차 정규직화를 통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아난탈로는 단순한 돌봄 기관을 넘어, 아동이 방과후 시간을 예술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문화예술의 허브로 발전했다. 아동들은 방과후에 이곳에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고, 또 직접 참여하며 사회문화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고,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주요한 연결 고리로 기능했다(남궁옥, 2025).

또한 자연학교(Luontokoulu)는 핀란드 전역에 걸쳐 확산된 생태·환경 교육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이다. 1980년대 환경교육 강화 흐름 속에서 시작된 이 모델은 현재 50여 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일부는 국립공원이나 지역 환경센터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운영 주체는 지자체와 환경단체, 학교가 협력하는 형태로, 돌봄과 환경학습을 결합한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은 숲 체험, 생태 탐방, 계절별 환경 관찰, 협력 학습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들은 숲과 자연 속에서 또래와 협력하며 학습하고,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경험을 한다. 이는 돌봄을 단순 보호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이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는 장으로 확장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Forsberg & Strandell, 2007; 남궁옥, 2025). 자연학교는 돌봄이 아동 발달의 전인적 차원, 즉 사회성, 환경 감수성, 협력성을 촉진하는 학습의 주요한 기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맥락

핀란드 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라기보다,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긴밀히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핀란드에서는 집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가족이 중심이 되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전통 속에서, 아동은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Forsberg & Strandell, 2007).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아동이 방과후에 무감독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아동 안전과 정서 발달, 또래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제기되었다(Karlsson et al., 2015).

특히 돌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어머니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일부 어머니들은 아동이 스스로 유능하게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사회적 압력은 여전히 어머니가 아동을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기대를 강하게 유지했다. 이로 인해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어머니’라는 낙인을 찍힐 수 있다는 불안이 공존했던 것이다. Karlsson 외(2015)의 연구에서 분석한 핀란드 어머니들은 ‘아이를 방과후 프로그램에 보내면 나의 돌봄 역할을 위탁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지만,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혼자 방치되는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중적 긴장이 드러난다. 이러한 서사는 돌봄을 단순히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담론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권리 담론이 강력히 부상하였다. 1989년 채택된 UN 아동권리협약이 핀란드 사회에 확산되면서, 아동은 보호와 교육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동이 방과후에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누릴 권리는 가족의 능력이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이는 돌봄을 복지 정책이자 동시에 교육 정책의 일부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핀란드의 돌봄 논의는 성평등 담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산되는 가운데,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방과후 돌봄 제도의 확충은 단순히 아동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었다(Forsberg & Strandell, 2007).

결국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담론의 결합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할 공적 권리로 전환하는 정당성을 강화했다.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재정의하는 흐름 속에서, 핀란드의 방과후 돌봄 제도는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는

동시에 부모의 노동과 양육의 조화를 지원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돌봄은 단순 보호가 아니라 아동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핀란드 모델의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토대로 평가된다.

2) 일본 초등 돌봄체계 사례 정리

(1) 도입 배경

일본의 방과후 돌봄 정책은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제도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직후 아동이 돌봄 공백에 직면하는 “초1의 벽(小1の壁)” 현상은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아사히신문, 2023.1.11.). 즉 보육원 이용 자격이 종료되는 동시에, 초등학교 수업은 오후 이른 시각에 끝나면서 맞벌이 가정 자녀가 집에 홀로 남겨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만들었고,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했다(김선주, 2024).

통계는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0년 840,835명에서 2022년 770,747명으로 감소하여, 사상 처음으로 연간 80만 명 이하를 기록했다(김선주, 2024). 이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아동 돌봄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2023년 ‘아동 미래 전략 방침’을 발표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부모 급여 신설 등 경제적 지원책과 함께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규정하였다(일본 내각관방, 2023.6.13.). 즉, 돌봄은 단순한 가족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구정책과 직결된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정책 추진의 역사적 흐름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1999년 ‘전국 아동 플랜’을 기점으로 방과후 돌봄 정책은 제도화되었으며, 2002년 ‘신 아동 플랜’을 통해 주 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아동의 여가, 돌봄 수요가 본격적으로 정책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어서 문부과학성은 2004~2006년 동안 ‘지역아동교실 추진사업’을 시행하며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후생노동성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방과후 아동클럽’을 확대하면서 돌봄의 생활적 측면을 제도화하였다. 2007년에는 두 부처의 정책이 결합된 방과후 아동 종합플랜이 출범하면서 교육과 복지의 이원적 접근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일본 문부과학성, 2007; 일본 후생노동성, 2015).

최근의 통계와 뉴스 보도는 돌봄 수요의 지속적 확대를 잘 보여준다. 일본 아동가족청(2025)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등록 아동 수는 약 156만 명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대기 아동 수는 여전히 17,013명에 달해,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The Japan Times(2025.7.29.)는 이를 두고 “등록 아동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방과후 돌봄 제도의 도입 배경은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아동 권리 보장이라는 다층적 사회 요구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음을 보여준다.

(2) 정책 제도와 특징

일본의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나는 후생노동성이 주도하는 ‘방과후 아동클럽(学童クラブ)’이고, 다른 하나는 문부과학성이 추진한 ‘방과후 아동교실(放課後子供教室)’이다. 전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부모가 주간에 부재하는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학습·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문부과학성, 2007; 후생노동성, 2015). 두 제도는 출발 배경과 주무 부처가 달랐지만, 현장에서는 동일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중복이나 비효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양 제도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과후 아동 종합 플랜’을 시행하였고, 이후 정책은 점차 ‘일체형’ 모델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문부과학성, 2007).

제도적 특징 가운데 주목할 점은 재정 구조와 운영 방식이다. 방과후 아동클럽은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이 비용을 3분의 1씩 분담하는 보조금 체계를 통해 운영되며, 학부모 부담금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혹은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 간에 서비스 질과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보고되었다. 또한 아동클럽 운영은 지자체 직영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NPO, 부모회 등 다양한 주체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제도임에도 지역마다 운영 철학이나 프로그램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김수동, 2015).

한편, 아동 보호와 발달을 위한 기준도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후생노동성(2015)은 아동클럽의 정원은 40명 이하, 지도원은 최소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일 3시간 이상, 장기 휴업 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돌봄의 안전성과 아동의 생활 리듬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기준 준수가 쉽지 않아, 기준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적된다(후생노동성, 2015).

또한 일본 정부는 저출산, 맞벌이 확대에 대응하고자 2014년 ‘신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방과후 돌봄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목표는 2023년까지 약 3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전체 정원을 152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었으며, 2025년 속보치에 따르면 등록 아동 수는 이미 156만 명에 달했다(아동가정청, 2025.7.29.). 이는 정책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대기 아동이 만명 이상에 달하는 현실은 제도 확충만으로는 수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The Japan Times, 2025.7.29.). 결과적으로 일본의 제도는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확충하는 데 있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과 수요 초과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거버넌스 구조

일본의 초등 방과후 돌봄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지방-지역사회가 다층적으로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각각 정책의 기본 틀과 지침을 마련한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와 연계한 학습, 체험 활동 중심의 방과후 아동교실을 담당하며, 후생노동성은 아동 복지법에 근거한 생활 돌봄 중심의 방과후 아동클럽을 책임진다. 이후 2007년 종합플랜 도입과 함께 양 부처가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의 지침을 토대로 실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도도부현은 광역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과 지자체 지원을 담당하며, 시정촌은 방과후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주체 선정, 인력 배치 등을 직접 담당한다. 김수동, 정영모(2016)의 연구에 따르면, 시정촌은 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춘 자율성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 간 돌봄 서비스의 편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방과후 돌봄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방과후 아동클럽의 경우,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NPO, 부모회 등으로 위탁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에 학부모가 참여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김수동, 2015).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가 돌봄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스포츠클럽이나 문화단체가 프로그램 제공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공공-민간 협력 수준을 넘어, 돌봄을 공동체 기반 활동으로 정착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사히신문(2024.12.24.)은 도쿄의 경우 대기 아동 증가로 학부모들이 운영위

원회에서 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인력 및 재정 부족으로 학부모 주도의 운영이 오히려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방과후 돌봄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복합적으로 얹힌 다층적 구조를 지니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 분담의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4) 운영 사례

일본의 방과후 돌봄제도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본 틀을 가지지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대도시 지역과 지방 소규모 지자체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동 수요가 급증하여 시설 공간과 지도 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다. 이처럼 대도시에서는 ‘대기 아동 문제’가 돌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방과후 아동클럽에서는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대기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대기 아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된다(일본 아동가정청, 2025.7.29.).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방과후 아동 보조 인력의 확보 및 정착 곤란, 경직된 인력 배치 기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일본 아동가정청, 2024; 미즈호 리서치 & 테크놀로지스, 2023). 결과적으로 일본의 돌봄 정책은 대도시에서는 ‘과잉 수요에 따른 대기 문제’, 농촌 지역에서는 ‘자원 및 인력 부족에 따른 공급 취약성’이라는 상반된 구조적 과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미즈호 리서치 & 테크놀로지스, 2023).

요코하마시와 오사카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전략을 도입해 왔다. 요코하마시는 방과후 아동클럽과 아동교실을 학교 부지 내에 통합 설치하는 일체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요코하마시 홈페이지, 2025.11.28.). 오사카부 역시 학교지원본부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NPO와 협력하여 돌봄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체육 및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하였다(오사카부 홈페이지, 2025.12.4.). 이 사례는 학부모 참여와 지역자원 활용의 전형적인 모델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는 부모회가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지도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특히 퇴직 교원이나 지역 대학생이 아동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방식은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동체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학부모

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어,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운영 사례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방과후 아동교실에서는 독서, 미술, 종이접기 등 문화활동부터 탁구, 배드민턴 같은 체육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후생노동성(2015)의 지침은 아동의 자유 놀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안전관리원, 학습 어드바이저 등의 배치를 통해 활동의 질을 담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운영 철학은 돌봄을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시간을 조직하고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장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5) 사회문화적 맥락

일본의 방과후 돌봄정책은 단순히 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대책, 공동체 문화와 깊이 연결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일본 사회는 오랫동안 ‘어머니가 아동을 직접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을 유지해 왔으나,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산되고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현실과 괴리되었다. 즉, 돌봄정책은 저출산 대응책이자 여성의 노동시장 재참여를 뒷받침하는 성평등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또한 일본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는 ‘초1의 벽(小1の壁)’은 방과후 돌봄정책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봄 공백이 발생해 부모, 특히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후생노동성, 2015). FNN 프라임 온라인(2023.3.10.)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후 돌봄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직장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방과후 돌봄이 단순히 교육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의 노동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회적 인프라임을 보여준다.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또한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는데, 방과후 아동교실은 지역 주민이나 문화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 돌봄을 공동체적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수동, 2015). 이는 돌봄을 가정과 학교의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책임으로 확장하는 담론적 변화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과후 돌봄은 아동 발달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대와도 연결된다. 후생노동성(2015) 지침은 돌봄을 단순 보호가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규정하며, 놀이와 교류 활동을 필수 요소로 포함시켰다. 이는 돌봄을 통해 아동이 포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율성을 키우는 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다. 결국 일본의 돌봄정책은 노동시장 구조와 성평등 문제, 저출산

대책, 지역 공동체 문화, 아동 발달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V. 서대문구 돌봄 자원 조사

이번 장에서는 서대문구의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돌봄 자원 조사의 현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장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대문구와 다른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들의 주요 돌봄 자원 현황을 비교하여 서대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어느 자원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서대문구 내 동별로 어떠한 자원이 배치되어 있고, 충분여부를 확인한다.

1. 서대문구와 서울 내 타 자치구와의 돌봄 자원 현황 비교

1) 개요

돌봄 자원의 범위는 돌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으나, 본 장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 기관과 예산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6세 대상)을 꼽았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별 2025년 예산 중 부문별 세출에서 교육-유아및초등교육, 사회복지-보육, 사회복지-가족및여성, 사회복지-청소년 부문을 광의의 돌봄 예산으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돌봄 자원에 대한 현황 비교는 단순히 자치구별 개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초등저학년 학생인 5-9세의 인구와 자치구별 경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2025년 2분기 월평균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와 소득에 비례하여 서대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돌봄 자원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V-1]에 위 돌봄 자원 현황 비교에 사용될 자료를 요약하였다.

[표 V-1] 사용될 자료 특성 요약

분류	항목	목적	운영 및 관할 주체/출처
돌봄기관	우리동네키움센터	○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분류	항목	목적	운영 및 관할 주체/출처
	(다함께돌봄센터)	있는 초등돌봄시설 ○ 집·학교에서 10분 거리 내 위치, 학교수업 이후에 자유 롭게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 (본 분석에선 중고등 대 상 포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 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 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을 지원하고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	
	방과후어린이집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저학년 우선 대상). 학습 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특 별활동비 부모수납한도 내) 등	
	서울형 키즈카페	○ 동적이고 안전한 놀이기구 설 치, 아동1인당 최소 7제곱미 터 확보, 보육교사 의무배치, 보호자 커뮤니티 공간 및 자 조모임 지원, 아동 1인과 보 호자 최대 5천원 이하, 휴일 포함운영	
예산	교육-유아및초중등교육(051)		지방재정365 예산, 부문별 2025년 세출
	사회복지 - 보육(08A)		
	사회복지 - 가족및여성(08B)		
	사회복지 - 청소년(08D)		
준거	5-9세 인구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월평균 소득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돌봄기관 설명 출처 :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2) 자치구별 돌봄 관련 기관 현황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하 키움센터)의 경우 서울시내 총 27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12개소로, 서울 내 자치구 평균 11.1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타 자치구평균 16.4개소인 것에 반해 서대문구에는 7개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서대문구에서 운영되는 곳이 없었다. 세 기관을 합친 수는 서대문구의 경우 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내 자치구 평균 28.4개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V-2] 자치구별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자치구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포함)	지역아동센터 (중고포함)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합
강남구	9	3	1	13
강동구	9	25	1	35
강북구	8	20	1	29
강서구	10	17	1	28
관악구	5	25	0	30
광진구	10	13	0	23
구로구	20	25	0	45
금천구	5	25	1	31
노원구	30	22	1	53
도봉구	8	17	2	27
동대문구	8	15	1	24
동작구	19	21	1	41
마포구	9	10	2	21
서대문구	12	7	0	19
서초구	6	8	0	14
성동구	13	9	1	23
성북구	15	23	1	39
송파구	20	18	0	38
양천구	8	21	1	30
영등포구	14	18	1	33
용산구	7	5	0	12
은평구	12	28	1	41
종로구	6	11	0	17
중구	9	2	3	14
중랑구	6	23	2	31
계	278	411	22	711
평균	11.1	16.4	0.9	28.4

다음은 방과후 어린이집의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확인하였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크게 전담, 통합, 장애아 어린이집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전담은 초등학생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통합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함께 함께, 장애아 유형은 초등학생 장애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다.

전반적으로 자치구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을 비교할 정도로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는 이 유형 중 전담유형의 방과후어린이집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3] 서울시 자치구별 방과후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자치구	방과후어린이집 유형			
	전담	통합	장애아	합
강남구	0	2	0	2
강동구	1	0	1	2
강북구	0	2	0	2
강서구	1	0	0	1
관악구	1	0	0	1
광진구	0	0	0	0
구로구	0	0	0	0
금천구	1	0	0	1
노원구	0	0	1	1
도봉구	1	0	1	2
동대문구	3	0	0	3
동작구	1	1	0	2
마포구	0	0	0	0
서대문구	2	0	0	2
서초구	0	0	0	0
성동구	2	0	0	2
성북구	0	0	0	0
송파구	0	0	0	0
양천구	0	0	1	1
영등포구	1	0	0	1
용산구	3	0	0	3
은평구	2	0	0	2
종로구	1	0	0	1
중구	0	1	0	1
중랑구	0	3	0	3
계	20	9	4	33
평균	1	0.4	0.2	1.3

다음은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수를 비교해보았다. 키즈카페 수는 서울시 전체 100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당 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대문구의 경우 일반형 키즈카페 3개소, 여기저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형이 여기저기형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감안해볼 때, 서대문구는 양적으로만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수 비교

자치구	서울형 키즈카페		
	일반	여기저기	합
강남구	1	0	1
강동구	6	0	6
강북구	1	1	2
강서구	4	2	6
관악구	4	0	4
광진구	5	1	6
구로구	1	0	1
금천구	2	1	3
노원구	2	0	2
도봉구	4	1	5
동대문구	4	1	5
동작구	11	1	12
마포구	1	1	2
서대문구	3	1	4
서초구	4	0	4
성동구	2	1	3
성북구	3	0	3
송파구	3	0	3
양천구	7	0	7
영등포구	2	0	2
용산구	1	0	1
은평구	3	1	4
종로구	1	3	4
중구	3	2	5
중랑구	4	1	5
계	82	18	100
평균	3.3	0.7	4.0

3) 자치구별 돌봄 관련 기관 당 5-9세 인구 수

그러나 앞서 각 돌봄 관련 기관별로 운영되는 숫자만을 다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자치구별로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크게 초등학생 돌봄의 수요가 가장 높은 5-9세 인구가 각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자치구의 추산된 월평균 소득, 그리고 자치구의 광의의 돌봄 관련 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돌봄 관련 기관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치구별로 총 인구수와 그 인구 대비 5-9세 인구 비율을 산출하였다. 서대문구는 총 인구 대비 5-9세 인구가 3.0%로 나타나, 서울 평균 2.9%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V-5] 자치구별 총인구수, 5-9세 인구, 총 인구 대비 비율

자치구	총 인구수	5-9세 인구	총 인구 대비
강남구	556,506	20,328	3.7%
강동구	497,190	18,651	3.8%
강북구	281,607	6,006	2.1%
강서구	552,467	15,665	2.8%
관악구	479,176	7,969	1.7%
광진구	332,900	7,994	2.4%
구로구	386,218	10,953	2.8%
금천구	224,288	4,692	2.1%
노원구	488,062	13,756	2.8%
도봉구	301,859	7,322	2.4%
동대문구	342,258	9,484	2.8%
동작구	374,837	9,979	2.7%
마포구	359,795	10,637	3.0%
서대문구	301,313	8,894	3.0%
서초구	407,516	15,973	3.9%
성동구	273,305	8,068	3.0%
성북구	423,045	12,831	3.0%
송파구	646,786	23,791	3.7%
양천구	428,554	14,945	3.5%
영등포구	372,874	10,401	2.8%
용산구	203,287	5,381	2.6%
은평구	459,248	12,102	2.6%
종로구	138,049	3,107	2.3%
중구	119,336	2,613	2.2%
중랑구	377,566	9,332	2.5%
서울전체	9,328,042	270,874	2.9%
서울평균	373,122	10,835	2.9%

다음은 앞서 확인한 자치구별 돌봄 관련 기관의 시설 수 총합으로 5-9세 인구를 나누어 보았다. 이는 각 총합 시설마다 관할하는 인구를 확인할 수 있기에 기관이 제대로 관할 지역의 돌봄 수요를 어느 수준으로 충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분석결과, 서대문구의 경우, 총 시설 수당 355.8명의 5-9세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평균 352.6명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자치구별 돌봄 기관 수 총합과 그 기관당 5-9세 인구

자치구	총합 시설 수	총 시설 수 당 5-9세 인구
강남구	16	1,270.5
강동구	43	433.7
강북구	33	182.0
강서구	35	447.6
관악구	35	227.7
광진구	29	275.7
구로구	46	238.1
금천구	35	134.1
노원구	56	245.6
도봉구	34	215.4
동대문구	32	296.4
동작구	55	181.4
마포구	23	462.5
서대문구	25	355.8
서초구	18	887.4
성동구	28	288.1
성북구	42	305.5
송파구	41	580.3
양천구	38	393.3
영등포구	36	288.9
용산구	16	336.3
은평구	47	257.5
종로구	22	141.2
중구	20	130.7
중랑구	39	239.3
서울전체	844	320.9
서울평균	33.8	352.6

그러나 돌봄 관련 기관의 유형마다 성격이 상이하여, 개별 유형마다 5-9세 인구를 자치구별로도 확인해보았다. 확인결과, 서대문구는 키움센터당 741.2명, 지역아동센터당 1270.6명, 서울형 키즈카페 당 2223.5명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도 존재하기에, 별도로 산출하지는 않았다. 서대문구는 서울 자치구 평균 1,104.6명보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당 5-9세 인구가 적어, 기관별로 평균적인 도달범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가로 각 유형별로 합산하여 기관유형군 당 5-9세 인구를 확인하였을 때는 다소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V-7] 자치구별 돌봄 기관유형 당 5-9세 인구

자치구	5-9세 인구				
	키움센터 당	지역아동센터 당	키움 + 지역아동센터 당	키움+지역아동+방과후아카데미 당	서울형 키즈카페 당
강남구	2258.7	6776.0	1694.0	1563.7	20328.0
강동구	2072.3	746.0	548.6	532.9	3108.5
강북구	750.8	300.3	214.5	207.1	3003.0
강서구	1566.5	921.5	580.2	559.5	2610.8
관악구	1593.8	318.8	265.6	265.6	1992.3
광진구	799.4	614.9	347.6	347.6	1332.3
구로구	547.7	438.1	243.4	243.4	10953.0
금천구	938.4	187.7	156.4	151.4	1564.0
노원구	458.5	625.3	264.5	259.5	6878.0
도봉구	915.3	430.7	292.9	271.2	1464.4
동대문구	1185.5	632.3	412.3	395.2	1896.8
동작구	525.2	475.2	249.5	243.4	831.6
마포구	1181.9	1063.7	559.8	506.5	5318.5
서대문구	741.2	1270.6	468.1	468.1	2223.5
서초구	2662.2	1996.6	1140.9	1140.9	3993.3
성동구	620.6	896.4	366.7	350.8	2689.3
성북구	855.4	557.9	337.7	329.0	4277.0
송파구	1189.6	1321.7	626.1	626.1	7930.3
양천구	1868.1	711.7	515.3	498.2	2135.0
영등포구	742.9	577.8	325.0	315.2	5200.5
용산구	768.7	1076.2	448.4	448.4	5381.0
은평구	1008.5	432.2	302.6	295.2	3025.5
종로구	517.8	282.5	182.8	182.8	776.8
중구	290.3	1306.5	237.5	186.6	522.6
중랑구	1555.3	405.7	321.8	301.0	1866.4
서울평균	1,104.6	974.7	444.1	427.6	4,052.1

다음은 각 자치구마다 2025년 총 세출예산 부문별 예산 중 넓은 의미에서 돌봄과 관련 있는 예산의 비율을 확인해보았다. 서대문구의 경우, 유아 및 초중등교육 2.2%, 보육 15.5%, 가족 및 여성 0.0%, 청소년 0.5%로 나타났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 보육의 경우 자치구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 및 여성과 청소년은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치구별로 세출예산 부문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V-8] 자치구별 2025년 세출예산 대비 부문별 예산 비중

자치구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A 보육	08B 가족및여성	08D 청소년
서울본청	8.7%	6.1%	0.6%	0.2%
자치구평균	1.7%	12.1%	2.2%	1.0%
강남구	3.1%	13.7%	0.2%	0.8%
강동구	1.4%	11.1%	6.7%	1.4%
강북구	1.0%	6.0%	2.7%	1.3%
강서구	1.0%	9.6%	5.6%	0.7%
관악구	1.8%	7.5%	4.0%	1.3%
광진구	2.0%	8.7%	4.6%	0.2%
구로구	1.4%	16.5%	0.0%	1.9%
금천구	1.4%	9.0%	0.8%	2.7%
노원구	1.2%	9.0%	4.7%	2.1%
도봉구	1.5%	12.1%	0.0%	1.2%
동대문구	2.6%	8.3%	4.9%	0.8%
동작구	1.4%	17.0%	0.2%	0.4%
마포구	1.6%	15.2%	0.9%	0.7%
서대문구	2.2%	15.5%	0.0%	0.5%
서초구	2.1%	18.2%	0.6%	1.1%
성동구	2.2%	16.7%	0.3%	0.7%
성북구	1.3%	8.0%	5.0%	1.5%
송파구	1.6%	13.2%	8.6%	1.2%
양천구	2.0%	13.9%	0.7%	1.2%
영등포구	1.6%	17.3%	0.0%	1.1%
용산구	1.3%	11.9%	0.1%	1.5%
은평구	1.1%	12.9%	2.1%	0.3%
종로구	1.3%	9.0%	0.1%	0.7%
중구	2.4%	7.9%	3.1%	0.0%
중랑구	2.5%	13.6%	0.0%	0.2%

4) 종합적 관계 확인

앞서 확인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 간 종합적 관계를 확인해보면서,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서대문구의 돌봄 자원 중 기관이 어느 수준으로 5-9세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앞서 확인한 지표들을 모아서 종합해놓은 표이다.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이 추가되었는데, 서대문구는 2025년 2분기 기준 월 평균 소득이 3,417,706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3,411,962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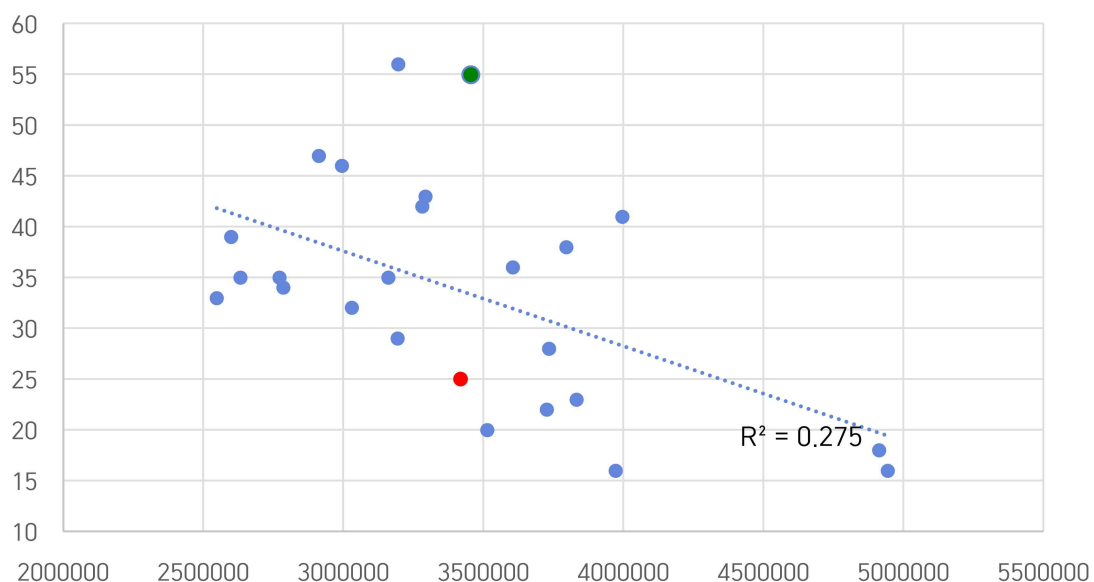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돌봄 자원의 경우 사회복지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민간 돌봄서비스(또는 교육서비스)로 충당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자치구별로 실제 적절히 돌봄자원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이 비슷한 수준끼리 비교해야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V-9] 종합적 관계 확인을 위한 주요 지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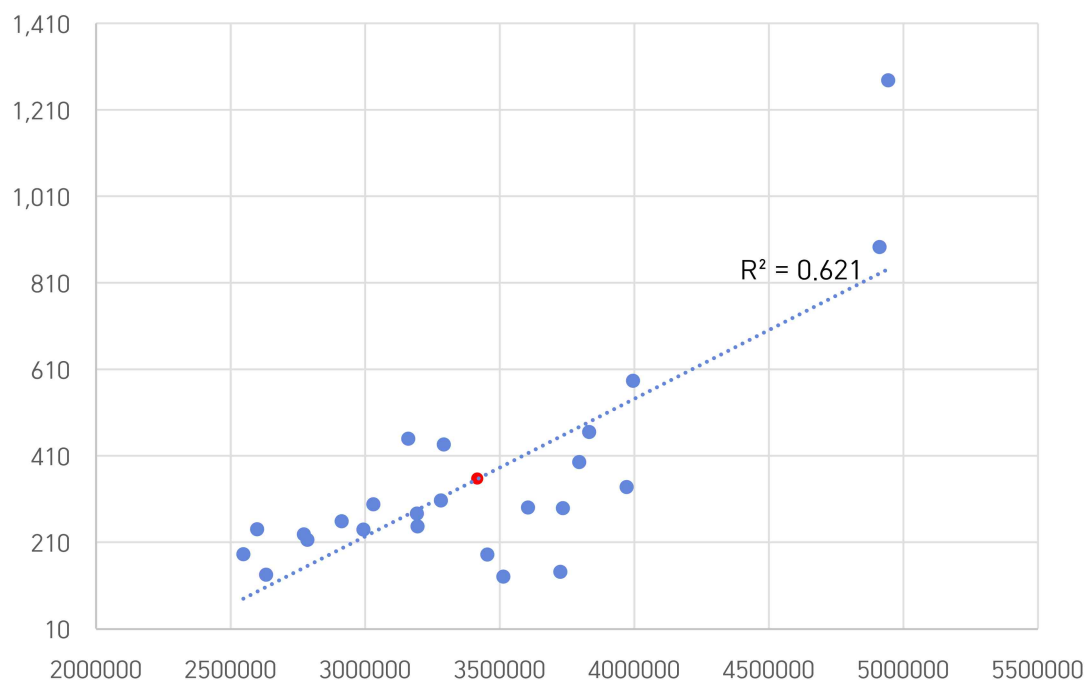
자치구	월평균소득	시설 총합	5-9세 인구			
			총 시설수 당	키움 센터 당	지역아동센 터 당	서울형 키즈카페당
서울평균 (전체)	3,411,962	844	321	974	659	2,709
강남구	4,943,841	16	1,271	2,259	6,776	20,328
강동구	3,292,857	43	434	2,072	746	3,109
강북구	2,547,460	33	182	751	300	3,003
강서구	3,160,623	35	448	1,567	921	2,611
관악구	2,771,927	35	228	1,594	319	1,992
광진구	3,192,971	29	276	799	615	1,332
구로구	2,994,059	46	238	548	438	10,953
금천구	2,632,285	35	134	938	188	1,564
노원구	3,195,375	56	246	459	625	6,878
도봉구	2,785,111	34	215	915	431	1,464
동대문구	3,030,256	32	296	1,186	632	1,897
동작구	3,454,170	55	181	525	475	832
마포구	3,832,436	23	462	1,182	1,064	5,319
서대문구	3,417,706	25	356	741	1,271	2,224
서초구	4,912,401	18	887	2,662	1,997	3,993
성동구	3,734,499	28	288	621	896	2,689
성북구	3,281,773	42	306	855	558	4,277
송파구	3,995,905	41	580	1,190	1,322	7,930
양천구	3,796,034	38	393	1,868	712	2,135
영등포구	3,604,887	36	289	743	578	5,201
용산구	3,971,498	16	336	769	1,076	5,381
은평구	2,912,739	47	257	1,009	432	3,026
종로구	3,725,859	22	141	518	282	777
중구	3,513,603	20	131	290	1,307	523
중랑구	2,598,785	39	239	1,555	406	1,8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별 다양한 지표를 교차하고 이를 시각화 및 관계를 파악하여 서대문구가 어느 수준으로 돌봄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는 돌봄기관의 총 시설 수와 월평균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관계는 우하향하는 관계로 나타났는데, 앞서 설명했듯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기에 민간돌봄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많다면 공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1차 직선형 추세선을 도출했는데, 월평균 소득과 총 시설 수와의 관계를 통해 도출하여, 특정 월평균 소득 수준이라면 평균적으로 총 시설 수가 이 정도로 도달할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는 자치구끼리 돌봄 자원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적색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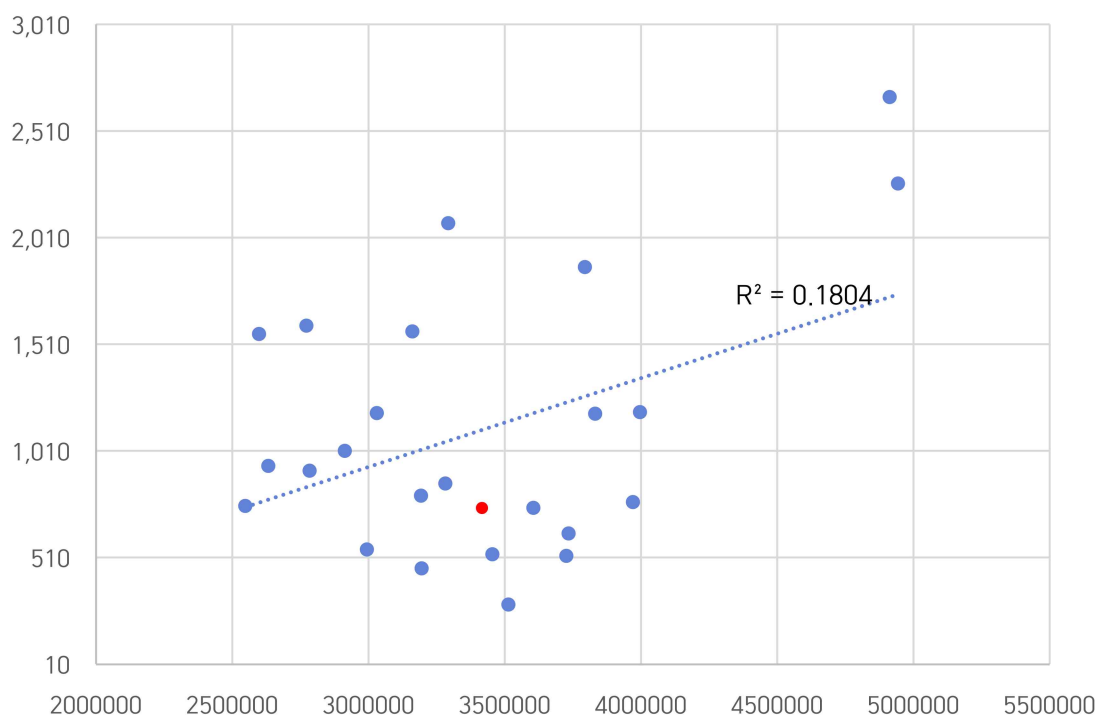
분석 결과 서대문구는 총 시설수 면에서는 유사한 월평균 소득을 보이는 자치구보다 양적인 수치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동작구(초록색)는 서대문구와 유사한 수준의 월평균 소득을 보이나, 돌봄 관련 기관이 총 55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V-2]를 보면, 서대문구는 돌봄기관 당 5-9세 인구가 356명으로 나타나, 추세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소득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평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별 주요 인구 차원에서는 돌봄 자원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림 V-3] [그림 V-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당 5-9세 인구는 오히려 추세선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동일한 소득 수준을 보이는 자치구보다 배분이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추세선 위에 서대문구가 나타나, 소득 수준에 비해 더 기관이 공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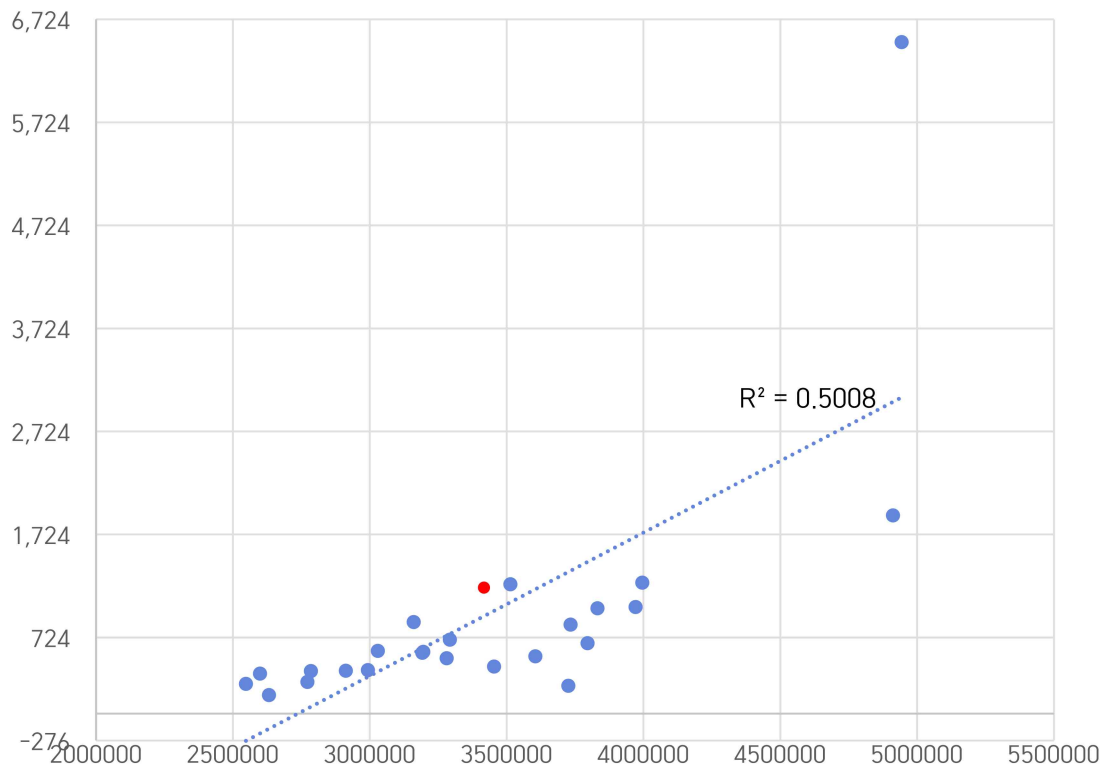
[그림 V-1] 총시설수와 월평균 소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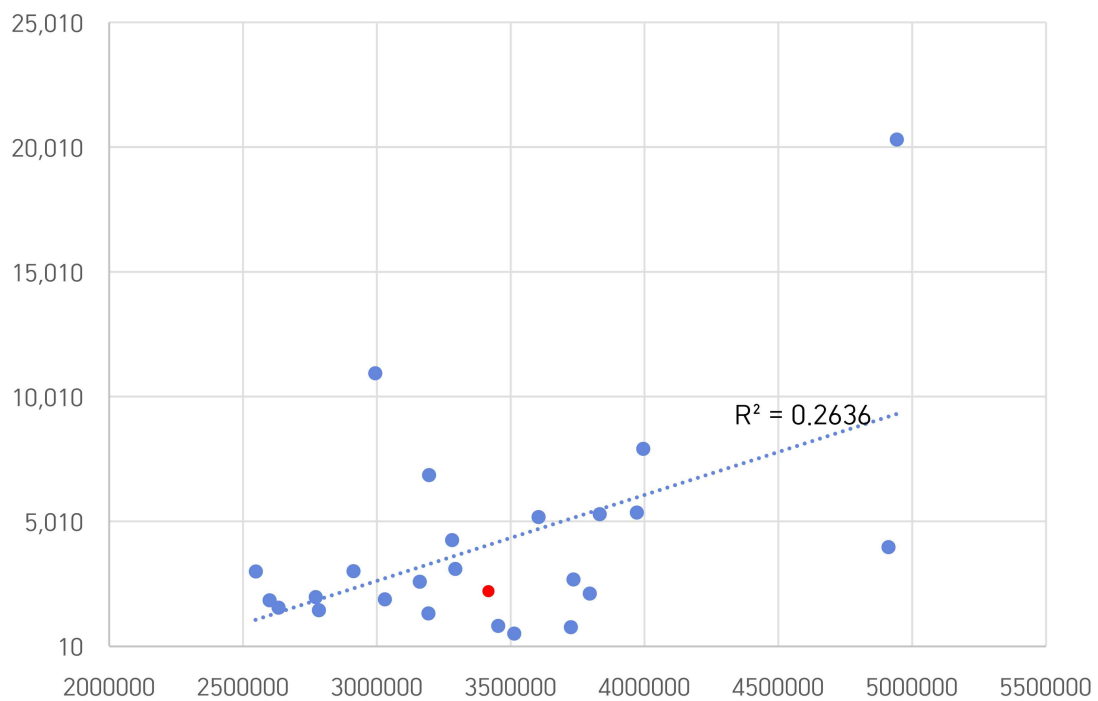
[그림 V-2] 총시설투자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그림 V-3] 키움센터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그림 V-4] 지역아동센터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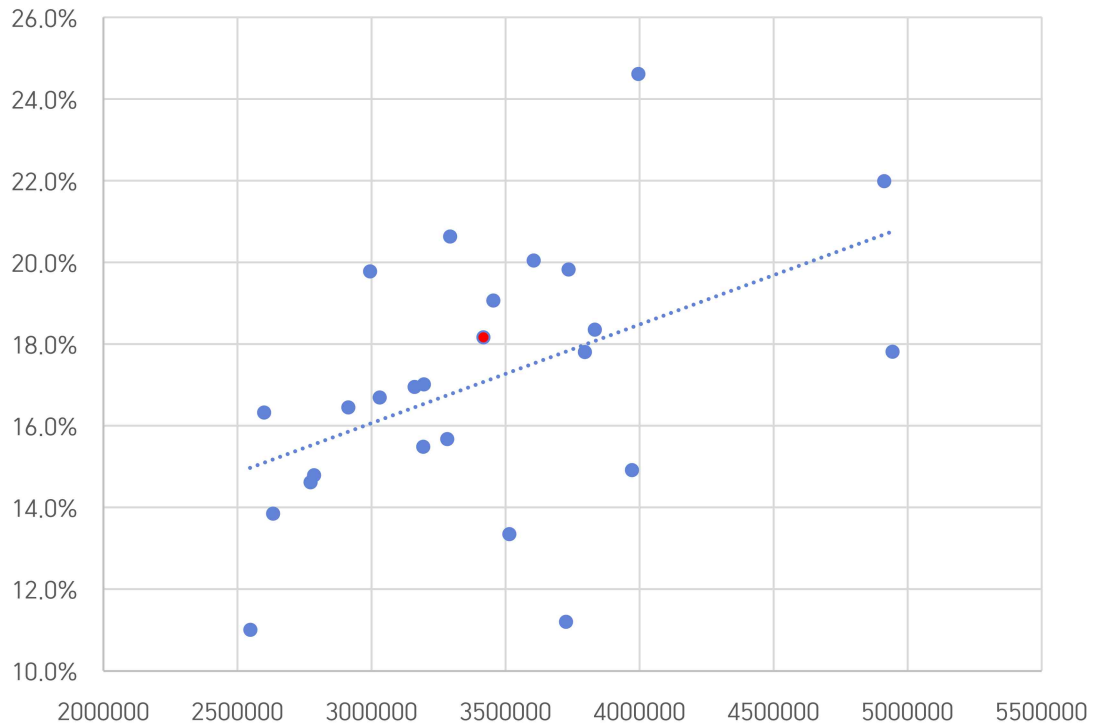


[그림 V-5] 서울형 키즈카페 당 5-9세 인구 대비 월평균 소득의 관계

다음은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과 세출 예산 중 부문비중을 [표 V-10]에 정리한 것이다. 이중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과 전체 돌봄 관련 부문 세출예산 비중과의 관계를 시각화 하면 다음 [그림 V-6]과 같다. 서대문구는 돌봄 관련 부문 세출예산 비중 합이 18.2%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10]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과 세출예산 중 부문 비중

자치구	월평균소득	유아·초·중·등 청소년	청소년+보육	유·초·중·등 +청소년 +보육	전체합
서울본청	-	8.9%	6.3%	15.0%	15.6%
자치구평균	3,411,962	2.7%	13.1%	14.8%	17.1%
강남구	4,943,841	3.9%	14.5%	17.6%	17.8%
강동구	3,292,857	2.8%	12.5%	13.9%	20.6%
강북구	2,547,460	2.3%	7.3%	8.3%	11.0%
강서구	3,160,623	1.8%	10.4%	11.4%	17.0%
관악구	2,771,927	3.1%	8.8%	10.6%	14.6%
광진구	3,192,971	2.2%	8.9%	10.9%	15.5%
구로구	2,994,059	3.3%	18.4%	19.8%	19.8%
금천구	2,632,285	4.0%	11.7%	13.1%	13.9%
노원구	3,195,375	3.3%	11.1%	12.3%	17.0%
도봉구	2,785,111	2.7%	13.3%	14.8%	14.8%
동대문구	3,030,256	3.5%	9.2%	11.8%	16.7%
동작구	3,454,170	1.9%	17.4%	18.8%	19.1%
마포구	3,832,436	2.3%	15.8%	17.5%	18.4%
서대문구	3,417,706	2.7%	16.0%	18.2%	18.2%
서초구	4,912,401	3.2%	19.3%	21.4%	22.0%
성동구	3,734,499	2.9%	17.4%	19.6%	19.8%
성북구	3,281,773	2.7%	9.5%	10.7%	15.7%
송파구	3,995,905	2.9%	14.4%	16.1%	24.6%
양천구	3,796,034	3.2%	15.1%	17.1%	17.8%
영등포구	3,604,887	2.7%	18.4%	20.1%	20.1%
용산구	3,971,498	2.9%	13.5%	14.8%	14.9%
은평구	2,912,739	1.4%	13.3%	14.4%	16.5%
종로구	3,725,859	2.1%	9.8%	11.1%	11.2%
중구	3,513,603	2.4%	7.9%	10.3%	13.4%
중랑구	2,598,785	2.7%	13.9%	16.3%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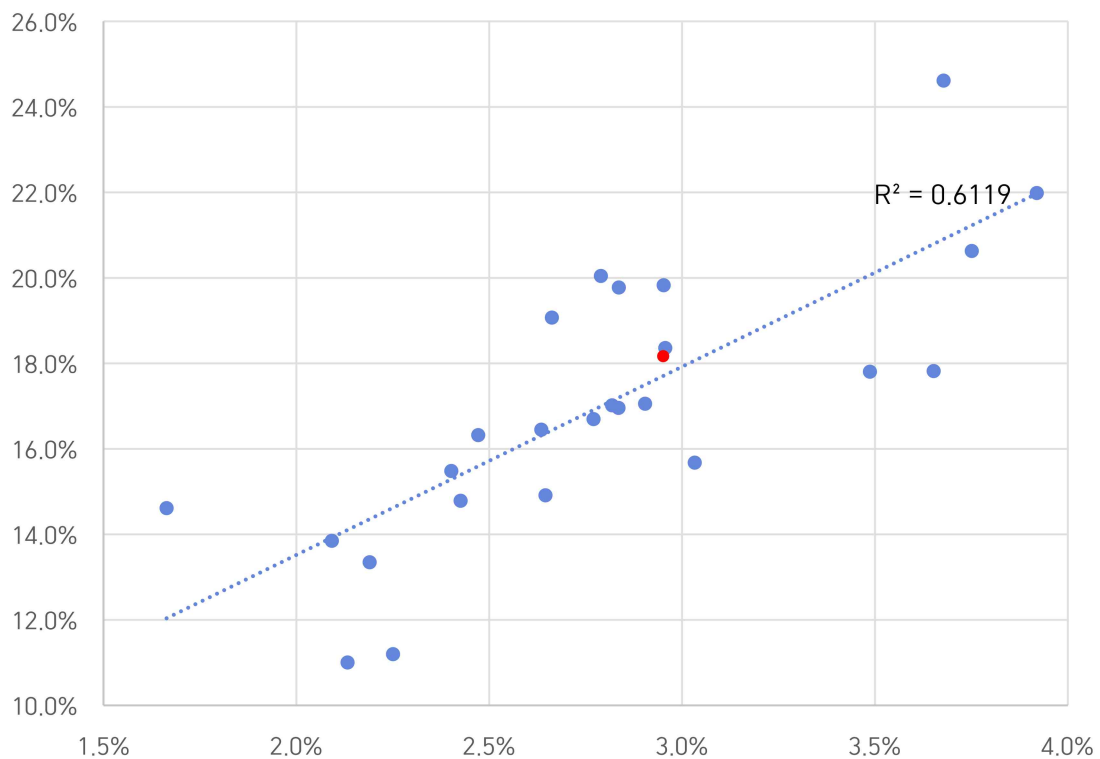
[그림 V-6]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과 돌봄관련 부문 세출예산 합

마지막으로, 총 인구 대비 5-9세 인구비율과 돌봄 관련 세출예산 비중합과의 관계를 [표 V-11]에 정리하였다. 확인 결과, 서대문구는 5-9세 인구 비중으로 예측한 예산합 비율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총 인구 대비 5-9세 인구비율과 세출예산 비중

자치구	총 인구대비 5-9세 인구비율	총 예산액 대비 유초중등, 청소년, 보육, 가족여성 부문 예산합 비율
자치구평균	2.9%	17.1%
강남구	3.7%	17.8%
강동구	3.8%	20.6%
강북구	2.1%	11.0%
강서구	2.8%	17.0%
관악구	1.7%	14.6%
광진구	2.4%	15.5%
구로구	2.8%	19.8%
금천구	2.1%	13.9%
노원구	2.8%	17.0%
도봉구	2.4%	14.8%

자치구	총 인구대비 5-9세 인구비율	총 예산액 대비 유초·중등, 청소년, 보육, 가족여성 부문 예산합 비율
동대문구	2.8%	16.7%
동작구	2.7%	19.1%
마포구	3.0%	18.4%
서대문구	3.0%	18.2%
서초구	3.9%	22.0%
성동구	3.0%	19.8%
성북구	3.0%	15.7%
송파구	3.7%	24.6%
양천구	3.5%	17.8%
영등포구	2.8%	20.1%
용산구	2.6%	14.9%
은평구	2.6%	16.5%
종로구	2.3%	11.2%
중구	2.2%	13.4%
중랑구	2.5%	16.3%



[그림 V-7] 총 인구 대비 5-9세 인구비율과 세출예산 비중 시각화

5) 소결

서대문구의 돌봄 관련 기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5-9세 인구 차원에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다만, 기관 유형별로 확인해봤을 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전무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중심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돌봄 기관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자치구 수준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느 정도로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는 자치구 소득 수준과 5-9세 인구비중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치구 전체를 평균적으로 확인해본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세부적인 돌봄 자원현황을 비교하여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양적인 차원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돌봄 기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 차원의 질과 수혜자의 인식을 확인하여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서대문구 내 동별 자치구 돌봄 자원현황 분석

1) 개요

이번 절에서는 서대문구 내 동별 자치구 돌봄 자원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내 행정동의 5-9세 아동 인구 분포와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자원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자료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2025년 10월 거주자 인구와, 앞서 활용한 서울키움통합포털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 데이터이다. 분석 대상은 서대문구 전역의 14개 행정동(천연동, 북아현동, 충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2,3동, 남가좌제1,2동, 북가좌제1,2동)이다.

2) 현황 진단

현황 진단은 크게 인구자료와 동별 학생통합맞춤지원 기관 두 가지 자료를 통해 시도했다. 먼저, 서대문구 내 행정동의 거주자 기준 총 인구수와 5-9세 인구 수, 그리고 그 두 인구 간의 비율을 활용한 것이다. 이를 아래 [표 V-12]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많은 5-9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많은 권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게 두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북아현동은 대단지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로 5-9세 이동 인구비율이 구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남가좌 1동은 6.6%로 서대문구 내 가장 높은 아동 밀집도를 보인다. 반면, 신촌동, 연희동 등 대학가 및 상업지구, 구도심 지역은 아동 인구 비율이 현저히 낮아, 돌봄 수요의 총량 자체가 적은 인구구조를 보인다.

[표 V-12] 서대문구 행정동별 인구수 분석

행정구역	거주자 기준 총 인구수 (A)	거주자 기준 5~9세 인구수 (B)	인구대비 비율 (B/A)
서대문구 전체	298,454	8,575	2.9%
천연동	16,262	482	3.0%
북아현동	15,052	597	4.0%
충현동	19,128	497	2.6%
신촌동	19,883	190	1.0%
연희동	32,933	633	1.9%
홍제제1동	24,213	653	2.7%
홍제제2동	11,866	278	2.3%
홍제제3동	17,163	476	2.8%
홍은제1동	22,973	629	2.7%
홍은제2동	27,245	746	2.7%
남가좌제1동	16,425	1,084	6.6%
남가좌제2동	28,434	1,183	4.2%
북가좌제1동	17,256	562	3.3%
북가좌제2동	29,621	565	1.9%

출처 :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동별 인구현황, 2025년 10월 거주자 기준.
(앞 절은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지 않아 이를 활용)

다음은 앞 절에서 살펴본 서대문구 행정동별 돌봄기관 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각 동마다 돌봄 기관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촌동과 홍은1동, 연희동에 관련 기관이 적거나 없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홍은-홍제 권역의 경우 홍제3동에 위치는 기관이 다른 동의 경계에 위치해있거나 하는 특징이 있으나, 제대로 다른 동의 아동 돌봄 수요까지 커버하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V-13] 서대문구 행정동별 돌봄기관 수

	남가좌 1	남가좌 2	북가좌 1	북가좌 2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천연동	충현동	홍은 1	홍은 2	홍제 1	홍제 2	홍제 3	계
키움센터		1	1	2	1		1	2			1	1		2	12
지역아동센터		1		1	1			2	1				1		7
방과후어린이집	1													1	2
서울형키즈카페	2		1					2						1	6

주)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는 구내 없어 제외함. 거점키움센터는 천연동으로 카운트.
출처 :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기준

다음으로는 광의의 범위에서 돌봄 기관 현황을 동별로 살펴보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 수를 동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기관명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및 학생 지원 기관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5-9세 인구 비율이 높은 남가좌, 북가좌를 중심으로 기관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홍은과 홍제동에는 지역아동/키움 센터를 제외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기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는 아래 [표 V-14]에 정리하였다.

[표 V-14] 서대문구 행정동별 학생통합맞춤지원 기관 수

구분	남가좌 1	남가좌 2	북가좌 1	북가좌 2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천연동	충현동	홍은 1	홍은 2	홍제 1	홍제 2	홍제 3	계
가족/다문화				1											1
교육복지	1														1
정신건강/자살 예방											1				1
지역사회복지	3				1	1	1			1					7
지역아동/드림스타트		1	1		1		1	3	1			1	1	1	11
청소년상담복지				1											1
청소년수련/문화의집		1					1			1					3
학교밖청소년/꿈드림								1							1
키움센터		1	1	2	1		1	1			1	1		2	11
바른식문화개발원				1											1
서대문아이존						1									1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					1
위프렌즈								1							1
계	4	3	2	5	3	2	4	6	1	3	2	2	1	3	41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

다음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능별 기관 수를 확인해본 것이다. 이는 중복을 고려하였기에 기관 41개보다 더 많은 55개가 수합되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돌봄 및 안전지원 역할의 기관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학업지원 기능을 주력으로 하는 기관이 서대문구에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교육 기관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게 잠정적으로 이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지만, 이 참여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학업지원 역할의 기관이 설립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V-15]에 정리하였다.

[표 V-15] 서대문구 행정동별 학생맞춤통합지원 기관의 기능별 분석

구분	남가좌 1	남가좌 2	북가좌 1	북가좌 2	북아현	신촌	연희	천연	충현	홍은 1	홍은 2	홍제 1	홍제 2	홍제 3	계
건강지원	1	1		2			2			1					7
돌봄·안전지원	2	2	2	3	2	1	2	4	1	1	1	2	1	3	27
경제지원	2			1	1	1	1	1		1					8
학업지원	1														1
심리·정서지원	2			2	1	2	1	1		1	1				11
기타										1					1
계	8	3	2	8	4	4	6	6	1	5	2	2	1	3	5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 기능별 중복반영

3) 주요 문제 추출

위 내용을 통해 주요한 문제점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제, 홍은 권역에 대한 광의의 돌봄 기관, 다양한 기능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기관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남가좌, 북가좌 권역은 높은 수요만큼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나, 이 권역은 숨겨진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홍은2동, 홍제1동의 5-9세 아동 수는 연희동이나 북아현동보다 많으나, 이 권역의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다양성은 가좌 권역 대비 부족하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교육복지’ 관련 특화 시설 부재가 관찰된다. 이는 인구수 대비 적정 서비스 총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둘째, 학업지원 공백에 따른 돌봄의 질적 한계가 확인된다. 5-9세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으로 이행하며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동시에 돌봄의 관점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연령대이다. 현재 서대문구의 동별 돌봄 인프라는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학습 지원의 기능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교육 및 학습 지원의 취약할 수 있고, 다른 기본적인 돌봄 지원 기관에서 이러한 역할까지 떠맡아야 하는 현황을 확인시켜준 것일 수 있다.

셋째, 대학가 근처의 동에 대한 돌봄 기관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이동 인구뿐 아니라 거주자 인구가 적기에 돌봄 기관의 전면적인 확충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돌봄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지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만큼 서대문구 거주 아동 누구나 공적 돌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4) 소결 및 제언

본 절에서는 서대문구의 행정동 별 돌봄 및 학생지원 기관의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여기서 확인된 문제는 동별 돌봄기관의 접근성 확대와 학습지원 역할의 기관 확충, 홍제-홍은 권역의 기관 확충을 추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돌봄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되, 동별로 부족한 기능이나 특화 기관이 없는 부분을 서대문구에서 통합적이면서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눈 기관별 위치는 주소에 기반하여 파악한 것이지만, 실제 위치는 동별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부족한 기관을 기계적으로 확충하면 기관별 중복 등의 비효율적인 돌봄 기관 운영이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서대문구에서는 여러 기능을 종합하여 동시에 복합기능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구 비중과 관련없는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지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족한 것을 보완할 방법으로 주변 대학들과의 돌봄 지원 학생 인력 모집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충당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입장에서는 필요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늘봄 학교를 통해 대학생과 연계한 방과후 자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돌봄의 사각지대인 오후 4시 ~ 오후 8시의 저녁돌봄에도 이를 지역사회에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공간에서 전문가와 함께 학습지원을 진행하고, 범죄경력확인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I. 인터뷰

1. 개요

본 연구는 서대문구에서 운영되는 돌봄 정책 및 기관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서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인터뷰의 대상은 크게 두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서대문구에서 돌봄 기관인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 그룹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 차원의 학부모(보호자, 이하 학부모) 그룹이다. 총 10명을 섭외하였으며, 기관장 4명과 학부모 6명이다. 인터뷰는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하였으며, 일정상 기관장 4명 학부모 1명이 6일, 학부모 5명이 7일에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방식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으로 진행되었다. FGI는 5명 내외의 인터뷰 참여자가 같은 시공간에 모여, 인터뷰 주제 및 질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대화 방식으로 연계성 있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히 논쟁적인 이슈나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발화를 유도함으로써 유용한 정보와 의견 등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서대문구의 돌봄 이슈가 논쟁적이라고 판단하고 FGI를 통해 중요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진행하였다.

모든 FGI는 녹취되었으며, 클로바노트를 통해 전사되었다. 이중 중요한 주제를 연구팀에서 추출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가 서대문구라는 좁은 지역 반경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장의 경우 매우 소수의 그룹이므로 특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모든 참여자를 센터장, 학부모로만 구분하여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

2. 결과

1) 서대문구의 돌봄 현황

지역 간 차이 극심

먼저 서대문구의 돌봄현황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서대문구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해달라고 하였다. 확인결과, 서대문구는 각 동네별로 특징이 뚜렷하며, 그 차이가 커 각 기관들이 관할해야 할 특징과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천차만별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서대문구

는 재개발 등으로 학령인구가 몰리는 구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OO 초등학교는 교장실을 교실로 바꿀 정도로 과밀 지역이고 그 지역에 저희 센터가 있는데 정원이 작다 보니 대기자가 너무 많고... (센터장)

OO 초등학교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 이쪽도 이제 재개발이 언제 될지 그거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교실이 좀 생겨요 (센터장)

OO동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 인구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아동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도 폐강이 잘 되는... 수업을 만들어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폐강이 다 됐었대요. (센터장)

돌봄 기관 별 특성화 노력

이러한 서대문구 내 다양한 지역별 특징에 맞게 각 센터들은 기관마다의 특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돌봄이나 쉼과 같이 이용하는 아동들의 정서적인 휴식처의 방향을 중시하는 센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수요 반영을 중시하는 센터가 있었다. 또, 아동에 초점을 두면서도 가정의 행복도 함께 지원하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희는 좀 아이들이 노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키움센터 색깔인 ‘돌봄’과 ‘쉼’이 있는데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문화 예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저희 ‘이제 모두가 같이 행복하자’라는 주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제가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정서적 안정이에요. ... 아이들의 가장 큰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100%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센터장)

저희가 주로 아이들의 욕구를 먼저 반영해서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 프로그램 외부 자원을 연결해서 활동들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 아이들이 자기들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고 충분히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센터장)

2) 연계 문제

다음은 학부모와 센터장 참여자 모두로부터 수합된 문제점들을 추출한 것이다.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 학교와 돌봄기관 간의 연계 문제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돌봄 기관 간의 연계 부족

학부모들은 돌봄기관을 이용하면서도 돌봄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수요나 기관 간 자원 및 운영방식 공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현재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크기에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일 상황에 맞게 돌봄 요청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거기서(일반 키움) 이제 좀 시간을 8시까지 하면 안 되냐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 선생님들도 퇴근이나 그런 시간적으로 안 되는지 ... (어려워 하셨어요) (학부모)

동네 키움센터에서 조금 분배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 기존의 대기 번호가 있고 ... (학부모)

갑자기 아프면은 두 세 시간씩 뭐 짧게 봐주는 데가 뭐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학부모)

시급할 때... 그 채널이 좀 열려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틀 정도나 잠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생겼으면 좋겠다. (학부모)

돌봄기관-교육기관(학교) 간의 연계 부족

돌봄기관에서는 교육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학부모나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학교나 교사가 지역사회의 센터와의 연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문제로 꼽고 있었다. 학부모 참여자는 놀봄이 3시까지 밖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돌봄기관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러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늘봄 프로그램이든 지역사회 돌봄이든 제대로 된 수요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저희가 선생님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소통을 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선생님은 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당신은 보호자도 아니고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왜 해야 되느냐라고 좀 차단하시더라고요. (센터장)

저도 입사하자마자 바로 학교에 전화했지만 계속 전화를 돌리기만 하지... (돌봄기관)에 대한 인식 정도도 낮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연계를 하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센터장)

학교에 요청을 드렸는데 학교는 대관료를 내라고 하셨어요. ... 외부인도 엄마들도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센터장)

3시까지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늘봄에서 돌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 우리는 그냥 늘봄을 원래 못하는 거예요. (학부모)

수요자 입장의 연계 문제 중에서는 상호 간 피드백 문제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의 가장 기본은 소통이기에, 기본적인 소통 창구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인 연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참고해볼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심화적인 연계를 하기 보다 서대문구는 기관-학교 간의 기본적인 연락 방식과 시스템을 수요자 관점에서 이용하기 원활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화를 드렸더니... 전체 늘봄 관리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받아서 중재를 이제 막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호 파악을 하고 싶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 그분을 통해서만 이제 의사소통 되다 보니까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학부모)

평가서를 (작성)할 때도... 불만족한 이유는 이거인데 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덧붙이고 싶어도 불만족의 이유를 덧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학부모)

선생님 개인 번호 말고 근무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있어서... 회신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돌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

3) 인력, 자원, 범위 문제

인력 문제

돌봄을 위한 절대적인 인력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핵심적인 문제로 항상 지적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도 중요한 문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드러진 인력 문제는 소위 말하는 ‘정규 시간대’ 돌봄이 아니라, 틈새 돌봄, 아침 돌봄, 방학, 병가 시 대체 문제 등과 같이 비정기적이지만 꼭 필요한 돌봄수행을 위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 근데 그분들이 2월, 3월부터 오셔가지고 11월 말 이러면 다 끝나요. 정작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그때는 이게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없어서 그럴 때 좀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센터장)

저희 선생님들이 아프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하고 교육을 가기도 하는데 대체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 방학 기간에, 겨울방학 기간에 아침부터 애들이 저녁까지 있는데 저희는 기타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의 인력이 돌아가면서 이제 휴게를 하면서... (센터장)

(아침 돌봄 선생님들은)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1, 2월의 공백이 생기고... 저희가 채용을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그 선생님들의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 선생님 (고용)의 안정화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센터장)

운영 문제

인력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돌봄 기관 자체가 협소한 경우가 많아 기관장이 모든 사무를 겸하고 있어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중에 현재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명목적인 성과 중심으로만 기관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나 프로그램의 효과 성과는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이 운영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 세금 신고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센터장)

돌봄 기관이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하는 것에, 안전하게 잘 운영하는지, 아이들이 정말 만족하는지를 봐야지, ‘그 프로그램을 몇 개 몇 개 해’, ‘그 프로그램의 누적 아동 수는 몇 명이야’, ‘너네 대표 프로그램이 뭐야’.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센터장)

인건비 문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나 수당의 문제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 돌봄 종사자들에게 재량껏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은 데 반해 업무의 범위는 너무 넓은 부분이 문제가로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들은 다른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때문에 다시 또 여러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과중의 연쇄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수당이 너무 없어서...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잖아요.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운영비에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센터장)

업무는 방대하게 구분 없이 시키면서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급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센터장)

(부족한 예산에서) 운영을 하려면 다른 기타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많이 해와야 돼요. 그걸 이제 센터장님들이 많이 해오시는데 그러려면 또 지역사회 연대를 해야 되고 (센터장)

공간문제

돌봄 기관의 공간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관찰됐다. 먼저, 지역사회 돌봄 기관 자체의 공간 협소 문제다. 특히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같은 공간에서 협소하게 장시간 있어야 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센터장 참여자들이 지적하였다. 또 이전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 넓은 공간으로 옮겨 갔을 때 관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협소한 공간의 문제는 결국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로 전이되며,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간이 좀 협소해요. ... 30명의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에 있는 데요. 스트레스가 좀 심하겠죠 적절한 공간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이전해서 넓은 데서 깨끗한 공간을 가는 곳에 안전하게 이용하는 좋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센터장)

공간은 대부분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하면 옆에 다른 건 못 해요. ... 저기는 미술 활동도 가꾸고 싶은데 재네가 자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방해될까 봐 못 가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 (센터장)

학부모 참여자들도 유사한 공간 문제를 인터뷰에서 제시하였으며, 다만 센터장과는 달리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적 자원들을 일종의 자율적인 돌봄 공간으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구하는 공간은 크지 않고, 작은 공간이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기관의 협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서대문구의 기관]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구민이고 구민의 아이들도 구민이거든요. (학부모)

빌라든 주택이든... 미니 도서관이라도 정말 요만한 공간이라도... 내과 하나나 소아과 하나가 들어갈 건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부모)

이동수단 문제

학부모 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중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학교-돌봄-가정 간 이동수단의 문제였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늘봄은 종료시간이 이른 오후이며, 부모가 통상 퇴근하는 저녁 6~7시 사이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때 학교에서 돌봄기관까지 이동할 때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돌봄 기관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에 있었던 이동 도우미 문제, 학부모 아동 픽업을 위한 주차장 문제 등도 돌봄 이동 간 문제로 지적되었다.

첫째가 끝나는 시간이란 둘째 끝나는 시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 늦게 끝나는 아이를 기다리기까지 첫째를 보낼 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 둘 차이가 뭐 30분밖에 안 나. 그럼 더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30분을 학교 앞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어디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도 시간이 애매하고 (학부모)

누군가가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학부모)

학교와 키움센터 간 이동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동 도우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없어졌대요. (학부모)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무조건 학원 차 아니면 학부모가 직접 (픽업)인데... 학교 안에 주차장을 이용도 못해, 인근에 주차장도 없어(서 여건이 어려워요) ... (학부모)

예약문제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의 수요는 기관 수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수행하는 데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부모들이 필요한 수준의 돌봄 기관과 서비스 확충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예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돌봄-가정 간 이동 문제에서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학부모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 돌봄은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키움은 학원에 갔다가 다시 키움에 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요) (학부모)

키움을 대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넣었더니 우선 대기가 한참 걸린다. 그러면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학부모)

연령범위

학교에서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저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에 있었다. 이에 3, 4학년과 같이 애매한 나이이거나 5, 6학년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가정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늘봄과 돌봄이 연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둘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1, 2학년만 해결이 되는데... 이쪽(늘봄)에서 하는 아이들은 이쪽(돌봄)으로 못 넘어가.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탁상행정한 거죠. 실제로 엄마들이 필요한 서비스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학부모)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저학년이 먼저 우선이에요... 고학년이 되면 솔직히 그런 혜택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 모든지 저학년이 우선이 되고... 저학년들만 위한 정책이 아니라 초등학교 전반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학부모)

비정규직-프리랜서 문제

학부모들의 지위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문제도 확인되었다. 특히 정규직이 아니라 유연한 노동 시간을 갖거나 늦게 퇴근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거리가 있는 거점 돌봄센터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 프리랜서의 경우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돌봄의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저는 학교 애들이... 4시나 5시에 수업을 하면 그때 일하러 가야 되니까... 저처럼 이제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에... 거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어요 (학부모)

나도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알바라도 하다못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거기다(돌봄기관에) 낼 수가 없거든요. 증명되는 것만 낼 수가 있잖아요. (학부모)

특수돌봄 필요

아동의 경우에도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센터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어

렵다는 점을 참여자들이 지적하였다. 이는 센터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아지는 경우,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주지 못할까 우려하였다.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ADHD나 혹은 느린 학습자나 장애 있는 아이 혹은 반사회성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8, 9명 됐어요. ... 근데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리가 거를 수는 없어요.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센터장)

맞벌이 조건은 안 되시는데 ... 아이들을 온전히 계속 오랜 시간 볼 수는 없는데 조건이 다 안 되는 거예요. ... 그런 맞벌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수요가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CCTV 설치 관련

학부모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돌봄 기관이나 교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교사-아동 간의 폭력 문제나 아동의 문제행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설치되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돌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돌봄종사자가) 폭언을 하셨어... 근데 그 교실에는 CCTV나 어떤 뭘 청취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학교장이 물어는 보겠다... 폭언까지 수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녹취가 있나 뭐가 있나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런 폭언을 늘상 있었는데... 그동안 넘어가면서 학기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 선생님을 꼭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CCTV가 있으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돌봄에는 개선할 점은... CCTV까지도 결국은 나아가야 된다. (학부모)

발전방향 토의 및 청취

마지막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학교-지역사회 돌봄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부처통합 및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먼저 센터장 참여자들은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현재 관할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여러 유형의 돌봄서비스 기관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지원받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와 돌봄 시설 지자체와 교육부가 이원화 체제에 있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 이것에 대한 관계 부처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

첫 번째로는 마을 안에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종사자 처우 개선... 세 번째로는 이제 연계 기관의 인력 배치 기간을 좀 조정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 빈 공간이 없도록... (센터장)

통합케어 모델

학부모들은 “OOOO”과 같은 민간 회사가 수행하는 모델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것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돌봄 모델이 발전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워스팻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공간을 구독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부모들은 필요한 서비스가 있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여기에 이동수단과 관련된 방안까지 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집 보관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고, 아이들이 뭐 프로그램도 있고... 엄마들이 돈을 내고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지역 사회에서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학부모)

그걸 지자체에서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단. 왜냐하면 사설에서 할 때 우리가 비용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자체에서 할 때도 비용 낼 수 있거든요 (학부모)

아이들이 하원 시 데리고 와서 뭔가 돌봄을 하다가 다른 학원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저녁을 먹여서까지 데리고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자체가 만들어주길 (학부모)

학부모 인력 활용

끝으로 센터장 참여자들은 현재 학부모들이 함께 돌봄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와의 연계에서도 학부모 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서로 간의 필요와 연결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면 현재의 분절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모님들로부터 교사 신청을 받았어요.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 직업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 생각보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 다양한 직업들이 되게 많으세요 (센터장)

저는 이제 그때 센터의 지역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 대표로 제가 (학교 운영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 이제 제 의견이 그래도 잘 받아들여지고 학교와 친해진 거죠 (센터장)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서대문구의 돌봄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돌봄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희망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지역사회 돌봄의 연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용적 기능과 자원 연계성을 발판으로 일과 중 교육-돌봄-가정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학교)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돌봄 체계는 상호 간의 소통 창구 불충분과 배타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돌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이용자 입장에서 기관 간 공식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이나 협의체를 마련하여 연계가 매끄럽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정보 공유는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물리적 연계

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돌봄기관-가정을 잇는 셔틀버스나 도보 도우미와 같은 이동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빈틈 없는 돌봄망’을 완성하는 것으로 온동네 돌봄 정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현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돌봄 기관’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학령인구 밀집도에 따라 돌봄 수요의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정원제와 대규모 센터 중심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별 특성에 맞춰 주택, 빌라, 유희 상가, 도서관 등을 활용한 소규모 틈새 돌봄 공간을 확충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때의 소규모 틈새 돌봄 공간은 아이들이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유연한 기관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적 돌봄 시스템에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돌봄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인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동시에, 경직되지 않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연한 인력의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돌봄 기관은 실무와 행정 업무, 아동 및 시설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에서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회계 및 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인력을 파견하거나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돌봄 종사자가 아동의 돌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아침, 방학, 담당돌봄 종사자의 병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취약 시간대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대체 인원 풀을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관 전반을 책임지는 인원이 책임을 갖되,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II. 우수사례 선정과 현장 답사

1. 개요

본 연구는 앞서 조사한 서대문구의 돌봄 자원, 국내외 사례,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여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우수사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어린이식당”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 식당을 우수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서대문구가 필요로 하는 돌봄 수요를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식당’이라는 개념은 학교 중심의 기존 공공급식 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복지 모델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어떠한 ‘공식적 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봉사의 개념을 운영하는 방식, 민간업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수행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지자체가 금전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서울시 내 어린이식당 개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가구와 복합위기 아동이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결식(특히 저녁)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직영, 위탁, 사회적 경제, 민간 참여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간략히 강동구, 노원구, 서초구, 은평구, 금천구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VII-1]와 같다.

전반적인 함의를 요약해보면, 모두 ‘선별적 빈곤 구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편적 돌봄과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 아동 급식 및 어린이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공이 공간과 기본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운영의 유연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민간 또는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는 식단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용하는 아동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배려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 대상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점도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표 VII-1] 서울시내 어린이 식당 운영 요약

구분	강동구 (강동 어린이식당)	노원구 (아동식당)	관악구 (마마식당)	서초구 (착한식당)	은평구 (마을부엌)
모델	직영	시설복합	자원봉사	민간업체	사회적경제
운영 주체	구청 직영 (전담 인력 채용)	구청 위탁 (아이휴센터 융합)	민·관 협력 (자원봉사센 터)	민간 자영업자 (자발적 참여)	민간 자발 결사체 (임의단체)
공간 특성	전용 독립 공간	공유 공간 (종교시설)	공공시설 유유 공간 등	기존 민간 영업장	협동조합 커뮤니티 공간
이용 가격	2,500원	1,000원 (일반 아동)	무료 / 저가	무료 (급식카드 확인)	일정 회비
주요 재원	구비 예산 (전액)	구비 + 시비지원	구비 지원 + 후원금	민간 업주 기부	회비 +공모사업비
타겟 대상	초등, 중학생 (보편+선별)	초등학생 (보편+선별)	취약계층 중심 + 지역 아동	결식우려 아동 (선별적)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주로는 주민전체 대상)
특이 사항	휴대폰 금지, 놀이 프로그램	특식 제공 위한 노력	코로나 시기 반찬 배달 전환	고가의 외식 메뉴 제공	식생활 교육 병행

출처 : 강동구 아동복지과 자료 (답사시 수령) 참조. 노원구 (서울&, 2023.4.20., 조선일보, 2019.8.13.), 관악구 (서울복지신문, 2018.12.24., 시정일보, 2020.9.29.), 은평구 (한겨레, 2020.1.26.; 환경정의, 2021.12.10.), 서초구 (서울복지신문, 2024.11.20.)

3. 강동구 어린이식당 개요

본 연구진은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식당을 12월 4일 (목) 16시경 방문 답사하였고,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었다. 강동구 어린이식당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강동구청 담당자 제공 자료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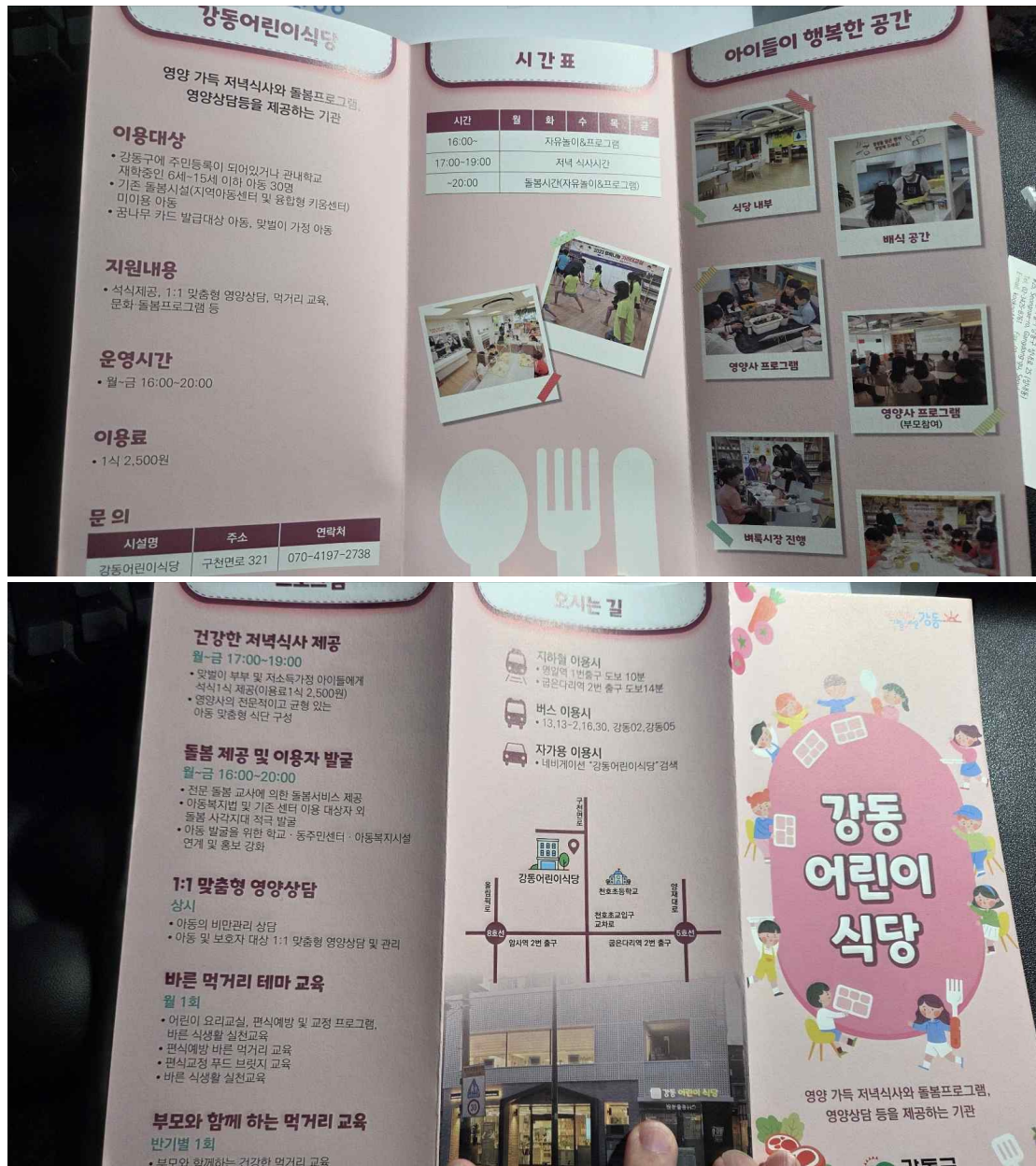
먼저, 어린이식당의 추진배경은 강동구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아동 비율이 높은 일부 권역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의 아동 지원을 위한 강동형 방과후 돌봄서비스 구축하기 위함이다. 즉,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21, 2층(암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1.07 제곱미터로 약 4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 개관일은 2021년 11월 30일이며, 전국 최초로 자치구가 직영으로 어린이 전용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직원은 총 3명이며,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돌봄교사 1명이다. 내부의 공간 구성은 주방, 식당, 사무공간, 놀이·커뮤니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 대상은 관내 6~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어린이식당의 정원 30명으로 설정되었다. 이용 대상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꿈나무 카드 사용자, 기존 돌봄시설 미수혜자 중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 기타 긴급 및 일시 이용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두고 있으며, 유연하게 돌봄 이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의의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는 방과후 또는 학원 이후 저녁 시간에도 학부모 및 보호자가 귀가하기 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석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직원 중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어 아동과의 맞춤형 영양 상담과 별도의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내부에는 이용하는 아동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도서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치구 관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동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돌봄 및 놀이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령, 바른 먹거리 테마교육, 강동보건소 연계 건강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신간 도서 책방 프로그램, 벼룩시장, 누구나 배움학교, 마을 방과후 학교 온돌방 프로그램 연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이용하는 아동들이 식사만하고 시간을 때우는 장소가 아니라 자치구 내에서의 유대감을 쌓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강동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30일 기준 일 평균 26명 총 6,278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림 VII-1] 강동 어린이 식당 팸플렛
출처 : 직접 촬영

운영 예산을 강동구 2025년 예산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약 2억원 규모로 한 기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주목해볼아야 하는 부분은 식재료비이다. 강동구는 1인당 식재료비를 6,000원으로 설정하되 개인 부담금을 2,500원으로 설정하여, 강동구와 개인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더 내실있는 식사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표 VII-2] 강동어린이식당 운영 예산 개요

강동어린이식당 운영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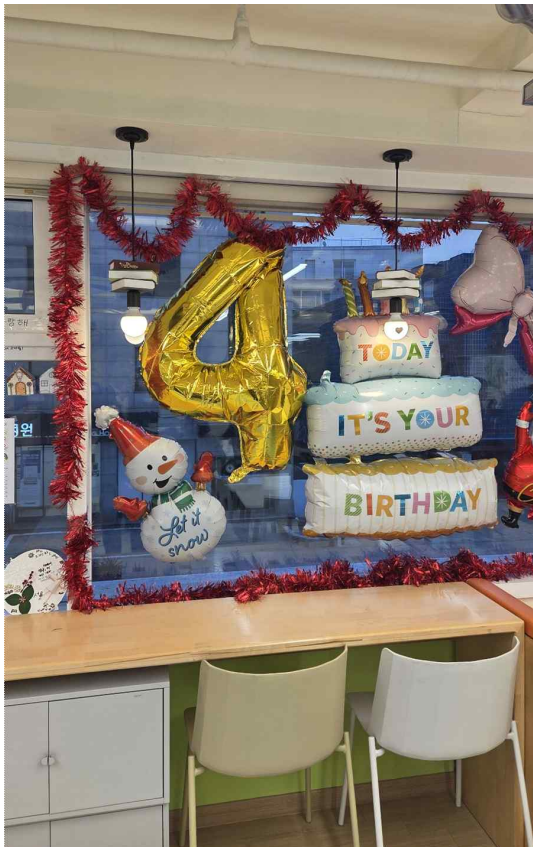
인건비(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포함)		63,467,000
사무관리비	소모품/주방용품	6,700,000
	어린이식당 임차료(12개월)	36,600,000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무인시스템, 통신요금 등	19,000,000
행사운영비	놀이 문화 프로그램 운영	5,000,000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425,000
재료비 (식재료비) (6,000원×30명×1식×20일×12월)		43,200,000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1,500,000
계		177,892,000

출처 : 강동구청 홈페이지, 2025년 예산현황, 세출예산명세서

답사하여 현장을 방문했을 때 특이할만한 점으로는, 이동하는 아동들이 어린이식당을 이용하는 순간만큼은 자발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동하는 아동 간, 아동-직원 간의 유대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최소한이라도 소속감과 규약에 기반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VII-2] 강동 어린이식당 답사 사진 모음 (1)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VII-3] 강동 어린이식당 답사 사진 모음 (2)
출처 : 직접 촬영

3. 소결 : 정책 적용 가능성 제언

본 연구가 위 강동구 어린이 식당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답사한 뒤,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 식당 모델은 ‘식(食)을 매개로 한 공적 돌봄의 외연 확장’이라는 점에서 서대문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저녁 돌봄’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깊다. 특히 기존 공적 돌봄이 가진 이용 대상의 경직성과 운영 시간의 제한을 극복하고, 돌봄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실증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서울시내 타 지자체 및 그외 지자체에서도 이 모델을 차용하여 공적 돌봄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어, 서대문구에서도 온동네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어린이 식당의 정책 적용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연한 정책대상 설정과 낙인효과 없는 돌봄 실현

먼저, 유연한 정책대상 설정과 낙인효과 없는 돌봄 실현이 가장 큰 함의라고 할 수 있다. 강동구 어린이식당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 대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하면서도 배제하지 않는 특성을 갖췄다는 점이다. 물론 어린이식당의 예산과 공간 제약 상 30명 정원이라는 제한이 존재하나,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 긴급 돌봄 필요 가정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를 상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가구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의 경우, 일부 동 지역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지역의 특수한 돌봄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 식사 제공을 넘은 유대와 커뮤니티 형성

둘째, 식사를 넘어선 정서적 유대와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현장 답사에서 확인된 강동구 어린이식당 사례의 차별점은 단순한 허기 해결의 공간이 아닌,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재정의했다는 것에 있다. 영양사, 조리사, 돌봄교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의 배치는 아동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와 함께,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와중에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하여 정서적인 지지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아동 간에도 식당 공간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 자제 등의 규약이 자발적으로 이행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기 쉬운 현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아동 간 교류와 건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소나 도서관 등과 같은 구내 다양한 공적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공공기관끼리도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여 질 높고 촘촘한 ‘온동네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의 예산 및 공간 효율성 증대 기대

끝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예산과 공간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증가하는 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과 공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부처별로 나뉘어진 기관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지자체가 별도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의 여러 정책적 부담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린이식당 모델은 오히려 유연한 접근을 취할 수 있어 기존에 포괄하지 못한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익자 일부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더 질 좋은 저녁 식사 서비스와 프로그램 구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간적 차원에서도 구성을 복합화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확인되고 있다. 즉, 식당으로 운영하되 기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III. 전문가 정책포럼

1. 개요

본 연구팀은 온동네 돌봄 정책을 발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공론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2025년 11월 8일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총 7명이 참석하였다. 김진경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이에 대한 패널 토론자로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이외 패널 참석자로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조민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 한민호 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최정윤 미성중학교 교장, 박석준 청춘벨딩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발표와 토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체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 한국 사회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의 복합위기”를 짚어보고,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해소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이후 섭외된 전문가들과 학생 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림 VIII-1] 전문가 정책포럼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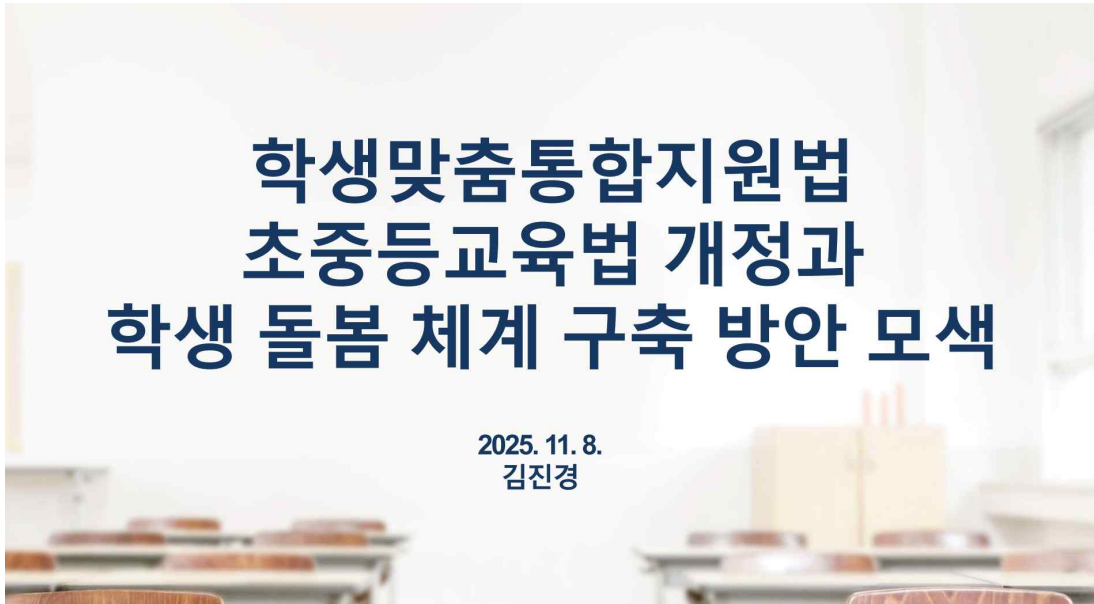


[그림 VIII-2] 전문가 정책포럼 사진 (2)

2. 주요 내용

1) 발표문

발표문 요약내용 (총 102페이지 분량)



I. 추진 배경: 교육 환경의 변화와 위기

1.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의 심화

- 인구 구조 변화 : 2000년 810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 328만 명으로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도움이 필요한 학생 급증 :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는 오히려 급증함.
 - 교육급여 수급자 : 2019년 약 29만 명 → 2023년 약 30만 명
 -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중3 수학 기준 2012년 3.0% → 2022년 11.1%로 급증
 - 심리·정서 위기 : 우울증 유병률 증가, 자살 학생 수 증가(2015년 대비 2023년 137% 증가), 자해 및 자살 시도 증가 등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2. '퍼펙트 스톰'의 도래: 복합적 위기 요인

- 디지털 팬데믹 :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스마트폰 및 숏폼 콘텐츠 과몰입, 사이버 불링, 온라인상의 위험 접촉 등이 증가하며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발달 과정의 붕괴 : 대면 상호작용 감소, 놀이 시간 부족, 공동체 붕괴 등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됨.
- 학교 현장의 어려움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급증하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협받고, 교사-학부모 간 신뢰가 약화되며, 교육의 사법화(법적 분쟁) 경향이 뚜렷해짐.

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

- 사업별 분절적 지원 : 기존에는 교육복지, 기초학력, Wee프로젝트(상담), 학교폭력 예방 등 각 사업이 별도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어, 한 학생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예: 가정빈곤 + 학습부진 + 우울증)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 사각지대 발생 : 특정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 방식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컨트롤타워 부재 :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할 통합적 시스템과 법적 근거가 미비했음.

II. 패러다임의 전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2025.1.21. 제정, 2026.3.1. 시행)

- 목적 :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
- 핵심 변화 (AS-IS → TO-BE) :
 - 대상 : 선별적 고위험군 학생 → 모든 학생 (보편적 지원)
 - 방식 : 사후약방문식 위기 개입 →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굴
 - 체계 : 분절적 프로그램 중심 → 통합적 시스템 및 학교 주도
 - 접근 : 문제 치료 중심 → 핵심 역량 함양 및 성장 지원

2. 주요 법적 근거 및 제도 정비

-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명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개별학생 교육지원), 보호자의 협조 의무 강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정보 연계 강화 :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복지 기관 등이 보유한 학생 지원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됨.

III. 학교 내 운영 모델 및 적용 사례

1. 학교 내 추진 체계 구축 (통합지원팀)

- 통합 조직 운영 :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위원회(학업중단예방위, 교육복지위, 기초학

력협의회 등)를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위원회)'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함.

○ 역할 분담 :

- 교장(감) : 총괄 운영 및 조정, 예산 지원
- 담임교사 : 학생 관찰 및 조기 발굴, 1차 상담, 지원 신청
- 전담인력(상담교사, 복지사 등) : 심층 진단, 전문적 개입, 지역사회 자원 연계
- 통합지원팀 : 복합 위기 학생에 대한 사례 회의 개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2. 유형별 지원 사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위기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사례 1

○ 기초학력 부진 중심 (복합요인 : 방임 + 교우관계 어려움)

- 상황 : 수업 거부, 교실 이탈, 가정의 돌봄 부재.
- 개입 : 통합지원팀 협의를 통해 학습지원교사(학습 튜터링), 상담교사(심리 상담), 복지사(지역아동센터 연계 및 돌봄 지원)가 팀을 이뤄 지원함.

사례 2

○ 심리·정서 중심 (복합요인 : 인터넷 중독 + 분노 조절 장애)

- 상황 : 잦은 결석, 게임 과몰입, 공격적 행동, 보호자의 비협조.
- 개입 : 병원 연계 치료 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 양육 코칭, 담임교사의 또래 관계 형성 지원 병행함.

사례 3

○ 학교 부적응 중심 (복합요인 : 아동학대 + 등교 거부)

- 상황 : 전학 후 부적응, 가정 내 갈등 및 가출, 아동학대 신고 이력.
- 개입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가정 분리/복귀 모니터링, 대안교실 프로그램(사회성 훈련) 참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링 연계함.

사례 4

○ 경제적 빈곤 중심 (복합요인 : 한부모 가정 + 위생 불량)

- 상황 : 끼니 해결 어려움, 위생 상태 불량으로 인한 따돌림.
- 개입 : 주민센터 긴급복지 지원 연계, 반찬 지원 서비스, 학교 내 샤워 시설 이용 및 의복 지원, 방과후 돌봄 제공함.

IV.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기·복합 사안은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함.

1. 교육지원청의 역할 변화 (지원 중심)

- 전담 조직 설치 : 교육지원청 내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는 전담팀(예: 학생성장지원팀)을 설치하여 학교를 밀착 지원함.
- 솔루션 자문단 운영 :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학교의 난제 해결을 도움.

2. 지역별 운영 사례

- 김포교육지원청 : '학교-교육지원청-지역기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신청 접수 창구를 운영함.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비상벨(성장지원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가 해결하기 힘든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지자체·전문가가 포함된 긴급 지원팀이 학교로 출동하여 컨설팅 및 자원을 연계함.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구청 및 유관기관(경찰서, 병원, 복지관 등)과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위기 가정 사례 관리와 복지 안전망을 공유함.
- 대구동부·울산강남 등 : 교육지원청 내 부서(초등, 중등, 생활, 복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함.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기대 효과

- 조기 발견 및 예방 :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
- 교원 업무 경감 :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강화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사각지대 해소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복지를 실현함.

2.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 : 특정 담당자(복지사, 상담사)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학교-교육청-지자체 간에 학생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시스템(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함.

○ 지역사회 협력 강화 : 학교 담장을 넘어 지자체, 병원, 복지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

2) 토론문 (전부 수록)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완성을 위한 제언: 행정 효율을 넘어 '학생 경험 중심'의 통합복지 생태계로

토론자: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1. 서론: 복합적 위기와 통합지원의 시대적 당위성

김진경 선생님의 깊이 있는 발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최근 법제화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정책 방향과 여러 시·도교육지원청의 선도적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지원의 현장 구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셨습니다.

발표에서 제시된 데이터는 우리 교육 현실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학령인구는 2000년 810만 명에서 2040년 32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2019년 약 29만 명에서 2023년 30만 명을 초과했고, 학생 자살자수는 2023년 221명에 이릅니다. 특히 '정상군' 학생의 자살 비율 급증(2019년 39.1% → 2023년 83.3%)과 '침묵군'이 자살학생의 50%를 차지한다는 분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 이미 만연해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 부진을 넘어 학습결손, 정서·심리 문제, 돌봄 공백, 디지털 위기, 가족구조 변화가 결합된 '총체적 발달 위기'입니다. 학생의 위기는 학업, 경제, 심리, 가정,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법 역시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발표자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법제화의 성과와 현장 구현: 행정 분절성 극복의 첫걸음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은 한국 학생 복지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특히 시범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주무관·전문상담사 등 다기능 인력 구조를 갖추고 통합지원팀을 구성한 사례들(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의 “학생성장지원팀”이 위기학생 지원·학교폭력·교육복지 업무를

결합 운영하는 모델)은 정책의 현장 구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법은 두 가지 핵심적인 법적 기제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포괄적 정의(법 제2조): 법은 지원 대상을 ‘기초학력 미달’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교육과 복지의 영역을 망라하여 정의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더 이상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둘째,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법 제17조): 법은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의 ‘연계·활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허물고 학생의 복합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입니다.

3. 핵심 과제 ①: 복지사회학 관점 - 문제의 행정화가 아닌 경험의 회복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학생맞춤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학생의 경험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생맞춤지원 체계가 지향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감·관계 회복·배움의 지속성입니다.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은 단순히 서비스 연계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신뢰 관계와 안정된 일상 환경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책 설계와 실행이 구조 중심으로 흐를 경우, 아이가 제도 속에서 또다시 ‘사례’로만 관리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 학교 소속감, 보호감, 학습 재참여 동기를 중심 지표로 설정
- 학생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학생 참여형 지원계획서”, “회복 경험 진술”, “학업·관계 포트폴리오” 등의 제도화

이는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니라 학생 삶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핵심 과제 ②: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진정한 통합 - 배타성에서 공동책임으로

발표 자료에서 제안된 학교 및 교육지원청 운영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나 교육지원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 ‘중앙’에 위치하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지역유관기관’은 지원을 요청하거나 연계하는 ‘외부’ 협력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법 제15조의 협력체계 구축 역시 교육감의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어, 이 구도가 법적으로도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교는 이미 교육·복지·보건 수요가 중첩된 아동을 만나고 있으며, 이들을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나 가정의 극심한 경제적 빈곤, 급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1차적인 보호와 지원의 ‘법적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는 학교가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학교가 ‘모든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는 순간, 교육의 본질 기능인 학습·관계·발달 지원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만약 새로운 통합지원 시스템이 또다시 ‘학교 주도’ 혹은 ‘교육청 주도’로만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통합’이 아닌 과거처럼 학교가 복지기관에 업무를 ‘연계’하거나 ‘외주화’하는 방식에 머무를 위험이 큼니다.

따라서 학교와 지자체는 다음 원칙으로 역할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 조기 발견·관찰·기초 중재·학습·관계 기반 지원
- 지자체: 복지·돌봄·정신건강·가정 지원·서비스 조정 책임

이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경쟁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가족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합하는 수평적 협력체계가 되는 방향입니다.

5. 실용적 정책 제언: 단계적·적응적 통합 전략

행정 간 통합은 철학적 의지뿐 아니라 제도적 호환성·조직 문화·전문 인력·정보 공유 체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가. 단계별 통합 로드맵

이는 정책이 ‘이념적 통합’이 아니라 실행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합이 되기 위한 실용적 접근입니다. 즉,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기능의 통합 → 경험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나. 구체적 실행 방안

첫째, 지역위원회의 법적 구속력 및 실행력 강화: 법 제6조에 규정된 ‘지역학생

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실질적인 통합 거버넌스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시·군·구청)의 복지·아동 담당 국장급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핵심 기관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곧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인력 상호 파견' 도입: 교육지원청의 '지역학생 맞춤통합지원센터'(법 제8조) 내에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반대로 지자체의 아동복지과나 드림스타트팀에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직(장학사)이나 상담교사를 상호 파견하여 '합동근무팀'을 시범 운영할 것을 강제안합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한 연계는 차갑지만, 사람을 통한 연계는 따뜻하고 빠릅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공유하고 매일의 실무를 공유할 때 비로소 행정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통합이 시작됩니다.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예산의 '매칭(Matching)':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과 지자체 예산을 '매칭 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청 예산을 지자체에 쓰는 것에 대한 재정적 저항을 줄이고, 지자체 역시 '지역의 학생'을 위해 공동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실용적인 협력 방안이 될 것입니다.

6. 평가 프레임의 전환: 숫자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정책 효과는 일반적으로 성과지표(KPI)로 평가되지만, 학생위기 지원 영역에서는 정량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안하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서적 안전감·소속감 변화
- 친구 관계 회복 및 교사와의 신뢰 관계
- 학습 참여도·지속성 향상
- 보호자 스트레스 완화 및 양육 역량 회복
- 위기 재발률 감소
- 학생 개인의 변화 진술

이러한 질적 지표는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니라 학생 삶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7. 결론: "아이를 중심에 둔 국가-학교-지역 시스템"으로

발표자께서 강조하셨듯이, 학생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의 행정적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소중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조직 통합이 아니라, 학생의 경험과 삶을 통합하는 공공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법을 ‘학교 안’에서만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관, 병원까지 아우르는 ‘학생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망’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 복지학적 관계 중심 접근
- 교육·지자체 역할 분담 및 공동책임
- 단계적·적응적 통합
- 학생 경험 기반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육행정은 오랜 배타성을 버리고, 일반행정 및 복지행정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결국 아이가 흔들릴 때 국가가 곁에 서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결 : 정책포럼 논의 내용의 서대문구 적용방안

전문가 정책포럼에서는 발표문과 토론문에 대한 열띤 논의가 수행되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대문구 돌봄 적용방안을 비판적으로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체적 삶의 지원 방향성

먼저, 서대문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온동네 돌봄 정책’의 방향성은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관내 아동의 총체적 삶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위기속에서 돌봄은 단순히 방과후 머물 곳이 없다는 물리적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정시-심리-가정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교와 돌봄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통합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사회 돌봄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내린 ‘학교 만능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활동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의 생활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역할 분담과 이후 유기적 연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학교는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학습 지원에 집중하고, 서대문구는 돌봄, 복지, 사례 관리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자치구당 교육지원청 확대 설치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 분담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문에서 제안한 ‘인력 상호 파견’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화학적 결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계 회복 중심의 돌봄 전환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다뤄졌던 내용 중 중요한 지점은 온동네 돌봄 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복지서비스의 관리를 넘어 ‘관계 회복’ 중심의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아동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일 뿐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돌봄 복지 서비스에 대한 효능감과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용 아동 수나 프로그램 운영 회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는 최소한으로 수행하되, 아동이 느끼는 관계 개선도나 심리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용 아동의 ‘경험 중심 질적 지표’를 도입하여 정책의 내실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지자체 간 협력과 정보 공유

마지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중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역할을 단순히 돌봄 서비스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미리 돌봄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 그 제공

의 적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역할로 전환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있듯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분절되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선제 예방하고, 서로의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서대문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아동의 여러 정보 등을 필요한
선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기
반하는 합리적인 돌봄정책 시행을 보다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IX.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과 돌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운동네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국내외 사례 연구, 서대문구 돌봄 자원 조사, 이해관계자 FGI, 국내 우수사례 선정 및 답사, 전문가 포럼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의 종합

먼저, 서대문구 돌봄 자원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의 5-9세 아동 인구 대비 돌봄 기관의 수는 서울 자치구 평균과 유사하거나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과 인구 비례를 고려할 때,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부재하여 취약계층 및 고학년 아동을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내에서도 재개발로 인한 과밀지역과 고령화로 인한 아동 감소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동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자원배분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연계의 단절’과 ‘돌봄제공의 유연성 부족’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FGI 분석 결과, 돌봄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상에 ‘학교 돌봄(늘봄학교)’과 ‘지역사회 돌봄’ 간의 연계 부족이었다. 학부모들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와 이동 수단의 미비로 인해 돌봄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아침, 저녁, 방학 등 틈새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컸다. 공급자인 센터장들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경직된 운영 지침,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체제의 개선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

셋째, ‘통합적 접근’과 ‘생활 밀착형 돌봄’이 현재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하였던 우수사례인 강동구 어린이 식당 사례와 핀란드,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돌봄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식문화, 놀이,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동구 사례는 저녁 돌봄 공백 해소와 동시에 낙인효과 없는 보편적 돌봄의 가능성을 구직영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서대문구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보인다. 전문가 포럼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룬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본 연구의 초점인 ‘온동네 돌봄’도 이에 발맞추어 갈때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 방향성 제언

본 연구는 서대문구의 돌봄 현황과 수요, 그리고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 체계성’, ‘접근 이용 유연성’, ‘재정 실효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돌봄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돌봄 시설의 양적 확대를 넘어, 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도 종사자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체계성 : 전문성과 민첩성을 겸비한 체계 구축

성공적인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돌봄 현장의 특수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존 직영 방식이 갖는 행정적 경직성과 민간 위탁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 약화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서대문구 산하의 별도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돌봄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도 철저한 운영 감사를 통해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결국 종사자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의 책임자나 핵심 관리 인력은 검증된 전문가로 채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실히 확보하면서도 현장 실무 인력은 틈새 및 긴급 돌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적인 탄력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에 전문적인 책임종사자가 책임과 자율을 갖고, 돌봄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접근이용 유연성 : 접근성 중심의 공간 마련과 혁신

지자체가 공적 돌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관 평가를 할 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존재하는데, 이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급자적인 시선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 현재 수요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보다 유동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운

영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다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재정 실효성 : 증가하는 수요를 대응하면서도 포괄적 목표 설정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재정 실효성은 단순히 기관을 운영하고 보조할 때의 원가와 단가를 줄이는 차원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재정 효율성은 오히려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와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가속시킬 수 있다. 이와 대비되게 여기서의 재정 실효성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통합적, 포괄적, 복합적인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접근성 확대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어떤 돌봄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특정한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기보다 특정한 방향성이 없더라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가 안전한 공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 정책 과제 제언

본 연구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운동네 돌봄 정책의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제언 1 : 서대문구 주도의 ‘학교-지역사회 돌봄 통합 거버넌스’ 구축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학교 돌봄(교육/지원청)과 마을 돌봄(지자체)의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해 서대문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도적인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기적인 자원과 행정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는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돌봄과 복지의 영역에서 지자체가 더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연계 과정에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언 2 : 식사와 쉼이 있는 유연한 돌봄 거점 도입 - ‘서대문 어린이 식당’

맞벌이 가정의 큰 고충인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과 식사 해결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돌봄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강동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영양사가 조리한 균형 잡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는 놀이와 학습지도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 아동들이 주변 또래와 어울리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교-돌봄기관-가정(학원) 간 이동 과정에서 학부모 및 아동이 안심하고 들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현재 지적되는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운다.

제언 3 : 틈새 없는 돌봄을 위한 정책 패키지 - 소규모 온동네 틈새 돌봄 공간, 아동 이동보장, 시간제 돌봄서비스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 대부분의 공간은 대규모 시설확충이 부동산 문제 등으로 어렵고, 서대문구의 경우 구릉지가 많아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제안한 서대문 어린이 식당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구석구석에 유휴공간들을 발굴하여 유연하면서도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적극 공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동네 위치한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이동도우미 위촉이나 셔틀버스 등을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예약제 기반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등도 고려하여 틈새 돌봄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언 4 : 돌봄 전문가/종사자 지위안정성 강화와 틈새돌봄을 위한 인력운용의 확대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전문가/종사자의 지위 안정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센터에서 필요한 수준의 돌봄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에서 인력풀을 크게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센터장의 과중한 행정 부담, 돌봄교사의 휴가나 병가로 인한 공백, 특수 시간대의 공백 등을 메울 수 있는 검증된 인력 풀 마련이 시급하다. 동시에 유연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을 적극활용할 때 그 효과성이 배가될 수 있기에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언 5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복합위기 선제 대응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일부 아동들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동할 때, 앞서 제언한 정책 과제의 실현 정도도 높아질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나 돌봄 기관에서 발견된 위기 아동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서대문구가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하여 필요한 복지,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아동의 개인정보 문제와 보호자의 동의 문제 등 기존 운영과정에 핵심 과제로 지적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지역 관내 학교와의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하라, 류임량. (2024). 서울시 양육자 육아 지원 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경향신문. (2025.2.18.). 출근 때 자녀 등교 돕는 '아침돌봄 키움센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 공정현, 유정화. (2025).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7(3), 639-658.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이드북**. 수탁연구자료 CRM 2025-04.
- 국민대학교 공지사항. (2024.10.23.). 시립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2025년 강사풀 정기 모집.
- 김선영. (2025). 돌봄학교 정책 도입과 초기 실행에 대한 교육주체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비평**, 57, 260-303.
- 김선주. (2024). **초등학교 돌봄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한대학교 대학원.
- 김송이, 장수정. (2024). 돌봄민주주의 관점에 기초한 돌봄거버넌스 연구: 서울시 초등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83, 51-80.
- 김수동. (2015).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정책과 운영사례 분석.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9(2), 87-109.
- 김수동, 정영모. (2016).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부처 간 연계방식 비교와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4), 279-288.
- 김수영. (2024).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6(1), 1-63.
- 김정호, 김선아. (2025). 아동 돌봄 정책의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돌봄 정책의 개선 방안. **컨설팅융합연구**, 5(2), 1-9.
- 김형규. (2023).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 남궁옥. (2025). **핀란드의 방과후 돌봄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5년 6호]. 한국교육개발원.
- 내 손안에 서울. (2024.2.14.). 돌봄 필요한 초등자녀에게 딱! 놀면서 배우는 '우리동네키움센터'
- 내 손안에 서울. (2025.2.19.). 출근길 아이 등교 걱정 끝!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확대.
- 뉴스와이어. (2024.12.2.).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나의 꿈 찾으러

‘키움 job월드’로 출발
 뉴스와이어. (2025.2.21.). 남산케이블카-동행연우회, 성북구 및 동대문구 돌봄기관 아동 대상 케이블카 체험 행사 진행.

뉴시스. (2025.6.30.). 성북구, 장위4구역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14호점' 개소.

동대문구청. (2025.1.20.). 동대문구, 초등돌봄시설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 개소[보도자료].

동대문이슈. (2025.9.23.). 동대문구,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라이센스뉴스. (2021.11.18.). 마포구,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돌봄 안전망 구축.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4.12.1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우리동네키움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진행 [보도자료].

마포구의회. (2023).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매일일보. (2023.2.24.). 마포구, 우리동네키움센터 8·9호점 오픈.

박성준. (2022).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수요 유형과 돌봄 서비스 만족도 차이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6(1), 147-167.

박성희, 권양이. (2023).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독간 비교 연구. **교육문화연구**, 29(3), 5-26.

박신희, 김민성. (2021).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일상에서 경험한 ‘배움’과 ‘돌봄’의 양상. **아동교육**, 30(1), 5-33

박준서. (2024).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교육비평**, 55, 267-310.

박지영. (2018).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육아정책포럼**, 58(3), 32-38. 육아정책연구소.

백순근, 이슬비, 장지현, 양현경. (2019).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 **육아정책연구**, 13(1), 55-74.

베이비뉴스. (2022.2.3.). ‘놀면서 배운다’,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열어.

서울강북신문. (2024.9.3.).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기관 연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신문 (2018.12.24.) 관악구, ‘행복한 마마식당’ 우수 행정사례 선정.

서울복지신문. (2024.11.20.). 서초구, 결식아동 돕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운영

서울사랑. (2018.10.). 우리 아이들, 온 마을이 함께 키워요.

서울신문. (2025.7.12.). 성북구, 돌봄공백 해소 및 아동 안전 확보 위한 종합대책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2025.2.24.). 새학기 달라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아침돌봄 전 자치구 확대되고, 이용자 편의 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2025 서울미래교육지구 지구별 사업 계획서.

서울특별시의회. (2023).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 (2023.4.20.). 부모는 부담 줄고 아이는 ‘양껏 한 끼’.
 시민일보. (2021.11.18.). 마포구, 지역 곳곳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마련
 시정일보. (2020.9.29.). 관악구, 전국 최초 어린이식당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
 심정미, 채현탁. (2015).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에 관한 쟁점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313-328.
 양애경, 양윤이. (2018).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 방안. **방과후학교연구**, 5(2), 19-36.
 양윤이. (2022). 학교안과 학교밖 돌봄운영의 실태 및 개선점에 관한 인식비교 연구. **방과후학교연구**, 9(1), 1-29.
 양윤이, 이태연. (2013).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직영과 사회적 기업에 의한 위탁 운영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1(4), 171-200.
 양천구소식. (2025.2.24.). 초등학생 방과 후 걱정 뚫! 우리동네 키움센터.
 양천구의회. (20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천구의회. (2025). 『양천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천구청. (2024.4.19.). 양천거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청 공식블로그.
 오마이뉴스. (2023.6.11.).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 높지만 종사자 만족도 열악.
 우리동네키움포털. (2020a).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2020.
 우리동네키움포털. (2020b). 서울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이방실, 권정윤. (2025). 우리나라 유아교육, 보육, 돌봄의 개념에 대한 고찰 - 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 **유아교육연구**, 45(4), 537-566.
 이성희. (2024). 늘봄학교의 정책 비전과 개념: 관계재 이론과 현장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7(2), 159-183.
 이송희, 홍승주. (2021).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영국 NHS 통합돌봄 모델과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41, 147-178.
 임현정, 정영모. (2017). 한국과 일본의 초등보육정책 비교 연구 — 여유교실 활용을 중심으로 —. **일본학보**, 112, 273-299.
 임혜정. (2017a).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과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7(4), 137-169.
 임혜정. (2017b).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65-86.
 자치행정신문. (2024.8.14.). 동대문구, 여름방학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장수정. (2020).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분석-돌봄 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67(1), 125-152.
- 장수정, 송다영, 백경흔. (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 장지은, 이성희. (2021). 학부모 요구의 관점에서 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방향. **학부모연구**, 8(2), 25-44.
- 장지현, 양영하. (2025).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초등 늘봄학교 정책의 중요 이슈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9(2), 159-178.
- 전국매일신문. (2019.11.22.). 성북구청·송례초·성북강북교육지원청, 초등 방과 후 쉼터 운영 MOU 체결.
- 전미양. (2024). 초등아동 양육자에게 이상적인 돌봄서비스란? - 서울시 초등아동 돌봄공백 양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73(1), 1-27.
- 전미양, 최현임. (2020).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통한 초등돌봄서비스 탐색: 서울시 온마을돌봄정책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6(3), 181-204.
- 정설미, 문희원, 정동욱. (2021).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hybrid)로서 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 쟁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9(5), 85-114.
- 정은경. (2025). MTSS(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어떻게 학교에서 실현되는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컨퍼런스 자료집. 13-21.
- 조선일보. (2019.8.13.). 저소득 아이들 눈치 안 보고 맘껏 먹게... '어린이만을 위한 식당' 국내 처음 문 연다.
- 조민기, 김미량. (2025).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늘봄학교의 도입 효과와 개선 과제. **한국융합과학회지**, 14(2), 145-155.
- 중구교육보육포털. (2021.4.16.). <중구형 초등돌봄사업>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 최종진, 박균달, 정영교. (2016). 초등돌봄정책의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방과후학교연구**, 3(1), 1-16.
- 한겨레. (2024.6.10.). 혼밥보다 '마을부엌'...돈 아끼고 소외 이웃 챙기고 '1석2조'
- 한혜정. (2022). 혁신교육지구 심화 모델로서 '미래교육지구'의 특징 탐색 - C미래교육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열린교육연구**, 30(5), 213-237.
- 홍진주, 정세미, 김은정, 김현진. (2021). 지역기반의 초등돌봄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초등돌봄 네트워크 형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 105-139.
- 환경정의. (홈페이지) (2021.12.10.) [활동] 마을부엌 현장조사# ①_은평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
- 황재연. (2024).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서울형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8(3), 113-140.
- 文部科学省 [일본 문부과학성]. (2007). 放課後子どもプランの推進: 放課後子ども教室推進事業 [방과후 아동플랜 추진: 방과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厚生労働省 [일본 후생노동성]. (2015). 放課後児童クラブ運営指針 [방과후 아동클럽

운영지침].

こども家庭庁 [일본 아동가정청]. (2024).

放課後児童支援員等の人材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令和5年度子ども・子育て支援等推進調査研究事業) [방과후 아동지원원 등의 인력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2023년도 아동·양육 지원 등 추진 조사연구 사업)].

こども家庭庁 [일본 아동가정청]. (2025.7.29.).

令和7年度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 (速報値) [2025년도 방과후 아동클럽의 실시상황(속보치)].

内閣官房 [일본 내각관방]. (2023.6.13.). こども未来戦略方針 [아동 미래 전략 방침].

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株式会社 [미즈호 리서치 & 테크놀로지스]. (2023).

多様化する学童保育事業の今後—民間ノウハウを活用したサステナブルな放課後時間の創出— [다양화되는 학동보육 사업의 향후 과제 — 민간 노하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방과후 시간의 창출 —]

朝日新聞 [아사히신문]. (2023.1.11.).

小1の壁とは?原因や問題点、乗り越える方法を具体例とあわせて紹介 [학작은 1의 벽이란? 원인이나 문제점,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소개].

大阪府. [오사카부] (2025.12.4.). 学校支援活動 [학교지원활동]. [홈페이지]

横浜市. [요코하마시] (2025.11.28.) 放課後キッズクラブ [방과후 키즈클럽]. [홈페이지]

City of Helsinki. (2025.1.8.). Fees for after-school activities. [Homepage]

City of Helsinki. (n.d.). After-school activities. [Homepage]

City of Kuopio. (n.d.). Afternoon activities in basic education. [Homepage]

Daly, M.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Eurydice. (2023.11.27.). Finland: Organisation of single-structure education (primary education). European Commission.

Finlex Data Bank. (1998/2003). Basic Education Act (628/1998) (as amended). Ministry of Justice, Finland.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FNN 프라임 온라인]. (2023. 3. 10.).

【#学童落ちた】SNSに相次ぐ保護者の悲鳴や怒り…仕事を辞める選択を迫られる人も 【#학동 떨어졌다】 SNS에 잇따른 보호자의 비명이나 분노…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람도].

Forsberg, H., & Strandell, H. (2007). After-school hours and the meanings of home: Re-defining Finnish childhood space. *Children's Geographies*, 5(4), 393-408.

Karlsson, M., Perälä-Littunen, S., Böök, M. L., & Löfdahl Hultman, A. (2016). Making Sense of After-School Care Dilemmas in Mothers' Stories of After-School Care in Finland and Sweden. *Children & society*, 30(2),

146-158.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4.12.10.). Finnish model for leisure activities increases schoolchildren's participation rate and reaches vulnerable groups. [Press Releas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n.d.). Before- and after-school activities. [Homepage]

The Japan Times [재팬 타임스]. (2025.7.29.). Number of children registered in after-school programs hits record high, but waiting lists remain long [방과후 프로그램 등록 아동 수 사상 최고... 대기자 명단은 여전히 길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

https://www.sen.go.kr/www/eduinfo/innovedu/innovedu_1.jsp

서울특별시 상권분석 서비스

<https://golmok.seoul.go.kr/>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umppa.seoul.go.kr/icare/indexP.do>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지방재정 365

<https://www.lofin365.go.kr/>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studentsupport/index.do>

[부 록]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정책 연구용역 FGI 안내문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회 소속 의원모임 ‘온동네 돌봄 연구회’에서 발주한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서대문구의 돌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뷰 개요

- 일 시: 11월 6일(목) 오후 3시 30분 (센터장 그룹)
11월 7일(금) 오전 11시 (이용자/학부모/보호자 그룹)
- 장 소: 서대문구의회
- 참여자: 서대문구 돌봄 관련 센터장, 직원, 이용 중인 학부모, 보호자, 수혜자 등 총 10명
- 소요시간: 최대 1시간 30분

2. 인터뷰 목적

이번 FGI는 서대문구의 돌봄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수집하여, 정책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에 예시를 적어두었습니다.

-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경험 공유와 의견, 발전방향
- 서대문구 돌봄 기관의 현황, 이용경험, 장단점, 발전방향

3. 인터뷰 진행 방식

본 연구의 인터뷰는 FGI로 진행됩니다. FGI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의 줄임말로 진행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대화하고 토론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소규모 인터뷰입니다. 다만, FGI가 일반 인터뷰와 다른 점은 논쟁적인 이슈를 의도적으로 던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연구주체와 관련된 가감없는 의견을 주시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유의사항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인터뷰 중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인터뷰는 녹취가 되나 녹취 파일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팀 외에는 서대문구의회나 기타 기관에 전달되지 않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녹취 파일은 연구 종료 후 6개월간 연구팀이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파기됩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내용을 한번 공유드리고 공개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연구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서대문구의 돌봄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온동네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팀 드림

(개인정보 가림)

- 아래 질문예시가 이어집니다 -

질문 예시

본 FGI는 공통된 질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자연스럽게 자유 질문으로 진행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아래 예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더 풍성한 인터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장/센터직원 대상)

1. 도입 및 현황 파악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속, 담당 업무, 돌봄 분야 경력 등)
- 현재 센터 운영 현황(정원/현원, 주요 이용 아동 특성)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나, 우리 센터(기관)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1~2년 간 돌봄 수요의 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추세가 어떤가요? (체감하는 최근 추세/동향 파악) 특히, 2024년 늘봄학교가 도입되고 난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2. 운영상 장벽 및 정책 요구

- 반대로, 센터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예: 인력 수급/관리, 예산 부족, 공간 협소, 행정 업무 부담, 학부모 민원 등)
- 현재 서대문구의 돌봄 관련 정책이나 구청/의회의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논쟁적 이슈) 최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낮은 보수, 과도한 행정, 전문성 향상 기회 부족 등)

3. 핵심 주제: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

-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체감하십니까?
- 현재 학교(늘봄교실 등)와의 연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어

떤 방식으로 학교와 협력을 하고 있나요? 협력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갈등은 없으신가요?

- (논쟁적 이슈) 이상적인 통합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돌봄은 지역이 전담해야 한다’ vs ‘학교가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 우리 센터가 학교 혹은 다른 돌봄기관과 더 잘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4. 미래 및 발전 방향

- 서대문구 ‘운동네 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늘 논의한 내용 외에, 서대문구 돌봄 정책 발전을 위해 꼭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이용자/학부모/보호자 대상)

1. 도입 및 이용 경험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거주 지역, 자녀 학년,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 등)
- 현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예: 프로그램, 돌봄 시간, 비용, 교사의 전문성, 아이의 반응 등)
- 현재는 돌봄 교사나 담당자와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충분히 원활한가요?
- 2024년 늘봄학교가 도입되고 난 이후 이용 경험이나 방식에 변화가 있었나요?

2. 불만 및 개선 요구

-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만큼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신청하는 과정은 편리했나요?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 (논쟁적 이슈) '학교 돌봄(방과후/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돌봄(키움센터/지역

아동센터 등)'을 모두 이용해 보셨거나 비교해 보셨다면,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핵심 주제: 학교-지역사회 통합돌봄

- ‘학교’와 ‘지역사회(센터)’가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녀가 학교 수업 후 지역의 돌봄센터로 이동할 때 안전 문제나 연계 과정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 (논쟁적 이슈) 학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돌봄은 어떤 형태인가요? (예: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다양한 기관 중 선택’, ‘지역사회의 전문 프로그램 활성화’ 등)

4. 미래 및 발전 방향

-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외에, “이런 돌봄 서비스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 틈새 돌봄, 주말 돌봄, 특화 프로그램 등)
- 내 아이를 위해, 서대문구의 돌봄 정책이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대문구를 위해서는 서대문구 통합 돌봄 정책이 어떤 대상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맞벌이 가정, 취약계층,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등)
- 오늘 논의한 내용 외에, 서대문구 돌봄 정책 발전을 위해 꼭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끝.